

역사가 심판한다, 현재 8인의 심판<3~12면>



이정미(54)



김이수(63)



이진성(60)



김창중(59)



안창호(59)



강일원(57)



서기석(63)



조용호(61)



누구나? 보수진영 'X맨'

<혼자 판짓 하는 사람>

당신은 좌·우 1대1 대결을 휘방 놓고있다



뭉쳐도 벅찬데
표발 찢고
제살 깎는
보수 난립
이대로 좌 부전승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당당한 경쟁, 떳떳한 승복”

운동장은 기울고 오른쪽 날개는 부러지고, 대한민국호(號)가 흔들리고 있다. '사이 보수'는 가만히 있드려 있으라는 '핀잔'마저 들린다. 세월호 이야기가 아니다. 대선 바람이 휘몰아치는 요즘, 신문에서 '여자'(與字)가 사라졌다. 사람들이 서로 쑥덕 쑥덕 묻고 답한다.

“여당은 아주 없어진 거요?”

“대통령이 저 지경 됐으니 여당이 간판을 내린 거죠”

<5黨, 中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라는 신문 제목이 낯설다. 탄핵파동 이전에는 <與野, ...촉구결의 합의>라고 적었을 것이다. '여'가 망가지니 보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정치판은 '야당 독주판'이 돼간다.

본지 大韓言論 제작진은 탄핵정국을 결산하고 현 시국을 가늠하는 방담을 가졌다.

이대로 가면 보수는 제대로 한번 겨뤄 보지도 못하고 끝장을 맞는 것 아니냐는 한숨과 비분강개에 쏟아진 자리였다.

이런 말들이 오갔다.

민주당은 적폐(積弊)청산을 외치며 벌써 집권한듯한 형세다. “사드 배치도 적폐인가.” 많은 국민들은 안보를 걱정한다. 지금 선거 판세는 탄핵 바람을 타고 편서풍이 거세다.

문재인 후보는 호남, 충청 경선에서 1위를 차지,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굳히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양강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세론'을 꺾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명분 없는 정치적이합집산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대선 대진표의 '왼쪽'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대선 대진표 '중간'과 '오른쪽'은 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가 본선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 홍준표 후보는 “한국당 후보가 된다면들 초상집 상주 노릇 밖에 더 하겠느냐”면서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에서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문(비문재인)연대 구축을 내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장고 끝에 대선출마를 공식화 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본선으로 가는 '왼쪽 티켓'은 사실상 예약 됐으나 '오른 쪽'은 중구남방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타이밍은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수가 범(汎)보수에게 묻는다.

보수의 표발을 찢고 제살을 깎아 먹으며 혼자 판짓하는 'X맨(혼자 판짓하는 사람)'은 누구냐?

보수가 범보수에게 당부한다.

'사이 보수'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라. 보수의 최대 덕목은 합리(合理)임을 상기하라. 정권을 상납할 요량이 아니라면 후보 단일화로 좌·우 1대1 결전에 나서야 한다.



탄핵 집회에 본지 4천부 배포 현장서 구독신청 줄잇고 성금 세도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토요 시청 앞 및 광화문 광장 탄핵 집회 현장에서 본회 발행 <大韓言論> 회보 4000여 부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20여명이 우편요금 3만원을 송금해와 1년 정기 구독자가 되었고, 특히 100여만원의 성금이 답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다.

본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회보 배포에 나설 계획인데, 참여 회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병대 본회 회장, 이향숙 사무총장, 김기동, 김성령, 김우상, 김조영, 나용경, 박문두, 박석흥, 유한준, 육정수, 이달영, 이보길, 이재권, 장옥, 최명우, 황유성 회우(가나다 순)

대선주자 경제공약 철저히 검증하라!



이두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촛점 빛나간 안목 위태롭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공약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경제는 내외환의 위기이다. 내부적으로는 성장률의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로 고통받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와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대두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까지 가속화되고 있다.

대선 후의 한국경제 인식오류 심각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현재 한국경제의 실업률은 5%로서 약 135만명의 실업자가 존재한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2.3%에 육박하여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들을 각론적으로 보면 몇 가지 우려할 점들이 있다. 우선 많은 대선주자들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를 분배의 개선으로 보고 있으며, 그 해법으로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분배의 악화에 있을까? 객관적인 통계지표들은 이와 같은 주장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한국의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는 최상위 20%의 소득과 최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하는 5분위 소득배수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의 소득분배는 OECD 평균보다 나쁘지 않으며,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왜 대선주자들은 우리의 분배구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상대적인 소득분배와 빈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인 소득분배는 나쁘지 않지만 빈곤률은 지속적으로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

OECD 자료의 경우 한국의 빈곤률은 14.6%로 이는 최근 경제위기를 겪은 그리스 및 스페인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OECD 전체 30개 국가들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그 추세 또한 개선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빈곤률이 높다는 것은 특히 고령인구 중 40% 정도가 빈곤층에 속한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빈곤률의 감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와 빈곤의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배위주의 정책보다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절실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선주자는 성장의 해법보다는 분배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장해법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그 방향이 시장경제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측

면들이 있다.

첫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로 인식하고 있는 대선주자들이 있다. 많은 수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고 하며, 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공공부문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다보면 민간부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재원조달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번에 경제위기를 겪은 그리스 등의 선례로 볼 때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둘째,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논리로 나누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재벌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습적 지배구조 그리고 불공정한 지배구조라고 폄하한다. 하지만 어느 한 국가의 기업지배구조는 그 국가의 경제발전 역사와 함께 진화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각 나라마다 지배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국의 지배구조를 한국에 이식하려고 하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경영이 지니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며, 실제로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볼 때는 전문경영인이 이끄는 기업보다 가족경영이 주도하는 기업이 성과가 높은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발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유

다른 이야기가 없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분배와 재벌개혁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외국의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은 한국경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 여러 국제기관에서 나온 지표들을 보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낙후된 금융부문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세계경쟁력지수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경쟁력 순위는 138개국 중 26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규제는 105위, 노사관계는 135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고용과 해고의 경직성은 113위, 은행의 건전성은 102위에 머물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순위도 나쁘지만 노동시장의 순위는 이보다 훨씬 나쁜 수준인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정규직 문제의 해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진짜 이유는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가 그러하다. 한번 고용하면 회사가 망하기 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또한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이 존재하는 한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규제완화에 관한 것이다. 아직도 한국은 각종 규제에 의해 기업활동 특히 대기업의 활동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기업들은 투자여력이 있어도 한국에 대한 투자보다는 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은 각종 보호주의 압력을 내세우며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의존도를 줄이면서 사드 사태에 따른 보복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국들은 모두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규제완화 및 법인세 완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차기 대선주자들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동승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넓은 안목을 지니기 바란다.

성장보다 분배강화 주장
시장경제 원칙과 안맞아
성장 일자리 창출 주체
정부가 하는 줄 잘못 알아

미래 불확실성 높는데 경제 민주화만 외쳐 그리스처럼 재정적자 늪에 빠지는 것 아닌가

며, 대기업은 규제의 대상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은 보호와 보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경제민주화의 논리가 창궐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과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장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2/3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대기업과의 하청 및 협업관계 하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의 매출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한국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재래시장 매출 증가보다는 소비자 피해만 가중하고 대형마트에 납품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소유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다. 대주주의 지분률에 상관없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치는 명백히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발의된 상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한국의 대기업 중 그 어느 누구도 외국의 투기자금에 취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IMF 사태를 겪으면서 론스타, 뉴브리지캐피탈, 소버린 자산운용 등의 투기자금들이 어떻게 한국의 유수기업들을 유린하는가를 똑똑히 보았었다. 만일 상법개정안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통과 된다면, 이와 같은 사태를 다시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셋째, 재벌개혁은 모든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노동개혁 및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별

다시 생각하는 대통령 책임제와 그 운영

의원내각제 위한 준비를 해야

대통령 탄핵전 수순 생략

1950년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미국 학자 그레고리 헨더슨이 한국의 정치를 ‘소용돌이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지적한 바 있다. 4.19, 5.16, 10.26, 5.18, 6.10, 그리고 작금의 탄핵정국이 모두 그러한 현상으로 한국의 정치를 변화시켜 왔다. 건국 70년 대한민국은 제도화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정상적인 정치과정, 다시 말하면 여러 기구와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국가기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이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 자체로 또는 사직당국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법률에 위배된 것이 있다면 처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정치싸움 형태로 탄핵을 일으키고 말았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했다. 최순실의 존재도 문제였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내분을 조장했고, 그 결과 당의 일부가 탄핵에 동조했기 때문에 길거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탄핵의 초기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의 문제를 개헌을 통한 체제개혁으로 극복해 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기까지 하였으나 대통령 되기 바쁜 사람들이 탄핵을 빨리 해야 바로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개헌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정치적인 가치판단과 세팅은 그대로 둔 채 대통령 선거를 급하게 하게 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임기 종반이 되면 대통령은 자기만으로 끝내고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즉 2원집정제나 내각제로 개헌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 지망자의 거부로 무산되었는데 지금도 그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체제와 제도를 잘 만들어 국정운영을 해보려는 생각보다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부터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내각제의 요소가 담긴 것을 그대로 두었다. 제도적 모순을 그냥 둔 채 자기가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국민이 체제와 제도의 정비에는 관심이 없었다. 우리가 일제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원하면서도 어떤 국가, 어떤 체제를 만들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헌법은 40여 년 동안 9차례나 개정되었다. 이승만은 전시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고 그 뒤 종신토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개헌하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의원내각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무리없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권력집중 정부 안정 안돼
국정 위한 토론도 없어
대통령 되기 바쁜 사람들
‘빠를수록 유리’ 탄핵 급조



배성동
서울대 명예교수
정치학

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제, 그리고 연임만 가능하게 해 놓고 평생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 결국 국본인도 불행을 겪고 국가는 혼돈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단임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임 대통령 2인의 임기 동안 ‘상왕’으로 군림하려고 했었다. 21년 집권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헌법에도 반영시켰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하였던 것이다.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뀔에 따라 헌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의 헌법이 30년 가까운 장수를 누리게 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권력분산형 헌법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강박감 때문에 대선은 먼저 치르게 되었다.

대통령제를 다시 생각하자

大統領을 풀이하면 ‘권력을 한 몸에

쥔’인데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용어다. 미국의 정치 중심은 의회(Senate와 Congress)다. 정치와 행정은 각 주(州) 단위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State를 州라고 하지만 그것은 원래 국가이고 그래서 衆國, 즉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으로 부각된 것은 전쟁을 통해서였다. 링컨, 루즈벨트, 트루만과

그 이후 미국이 세계 전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President의 권력이 확장되었고 그 이미지도 우리가 大統領이라고 부르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막강해진 것이다.

그러나 정치문화적으로 권력자를 갖고 싶지 않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차제에 대통령이란 호칭을 그만두고 주석(主席)으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임기 동안 권력이 안정되는 것을 꼽는데 오늘날까지 정부의 각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이 채 못

행태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서서 말하면 기라성 같은 고위직들이 매모하는 장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매모하지 않는 장관을 “머리 좋다”고 비꼰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원집정제의 허점

새로운 권력구조를 헌법에 새겨 넣는데 있어서 2원집정제가 정계나 여론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나 운용의 실제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고 막연히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국무총리는 일반 국정을 나누어 책임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뽑는 직선으로 하자는 것이 대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직선’은 정치적인 힘(카리스마)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다. 직선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보다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한민국처럼 국방과 외교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국가에서 정치(국회)와 일반 행정으로부터 그 분야를 분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무총리가 국회와 행정부 청사에서 집무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집무할 것인가?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외교사절을 접견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현대국가의 국가운영에서 권력의 분립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를 바람직하게 발전시키자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당정치의 퇴영이다. 의원내각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정당정치다. 겉보기에는 정당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 첫째, 정당들은 국민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차피 국고보조로 정당이 운영되는데 정당을 ‘돈 먹는 하마’로 판정하여 지구당 조직을 없앤 것은 큰 잘못이다. 비유하자면 뿌리 없는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없다.

둘째, 정당을 육성하는 기본은 당원을 모으고 교육시키는 일이다. 지난날 민주공화당과 민주정의당은 훈련원, 혹은 연수원의 시설을 갖추고 당원교육을 열심히 하였다. 독일이 나치의 전체주의로부터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정치(민주주의) 교육을 받게 한 것이 바탕이 되었다.

당원들이 일반국민의 모범이 된다면 국민의 정치적 교양수준이 올라 갈 것이다.

국민 속에 뿌리 내리는 정당 육성해야 할 때 당원 훈련은 국민의 정치적 교양 높일 수 있어

모아 진 우두머리’다. 대통령은 미국의 President인데 19세기 후반 서양의 정치에 접하던 일본인들은 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정확한 번역을 하지 못하고 음역으로 표현하다가 중국에서 원세개가 권력자로 등장하여 장차 황제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선 대통령, 또는 총통이라고 호칭하게 되자 그것을 그대로 따와 大統領이라고 정착시켰다. 자유중국(대만)에서는 總統으로 제도화되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 중심제라고 일

된다. 결코 정부가 안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장관이라는 호칭도 그렇다. 미국에서는 President의 대행(代行)이므로 Secretary라고 한다. 국무회의 같은 것도 없다. 내각제의 경우(영국, 일본, 독일) 매모지 한 장 들지 않고 둘러 앉아 의논하는 것이 고작이다. 우리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이 일이지 국정운영을 위한 토론은 하지 않는다. ‘받아 적는 것’을 영어로 dictate라고 하지만 Dictator, 즉 독재자(獨裁者)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우리는 심각한 헌정위기와 국론분열의 상태에 처해 있다. 이에 더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보복 조치로 우리는 국제질서 전환의 소용돌이에 급속히 휘말려가고 있다.



조 성 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은 음흉한 分裂奸計일 뿐

국제질서 급변기의 격랑 속
내우는 외환을 부르게 마련
한미동맹 이익 극대화 필수
慕華崇中 후보 당선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안의 혼란, 밖의 압력이 증첩된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안과 밖이 모두 유례없는 위기적 상황에 봉착했다. 대한민국은 백적간두에 서있는 것이다.

이번 탄핵사태는 ‘최순실 게이트’를 광적으로 부풀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탄핵 선동 세력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들은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전체주의적 민중주권론을 내세워 다수 국민과 국회의원, 언론과 사법기관을 겁박하여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탄핵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역이용한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의 음모와 선동이 작용했다는 점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탄핵사태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파면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과 법치주의가 탄핵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영대 일당 등 하찮은 무리들과 주요 언론기관의 음모로 시작된 이번 탄핵사태는, 민노총, 범민련을 위시한 이적단체들의 ‘촛불’의 노도(怒濤)를 통한 체제전복 기도, 이에 영합한 검찰의 무분별한 대통령 고발, 당리당락에 몰입된 국회의원들의 부분별 탄핵의결, 소추의 절차적 흠결,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하고 졸속한 심리로 만장일치적 탄핵심판이 결정되었다. 이번 탄핵 결정은 외견상 합법성(legality)을 근거로 진행되었으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적 정당성(legitimacy)이 일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다.

탄핵정국은 국가의 통치 기능을 마비시켜, 한국은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보복은 바로 이러한 국내정치적 혼란을 틈탄 폭거이자, 곧 있을 우리 대선에서의 친중과 후보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나 다름없다. 탄핵사태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고 선동한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으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를 북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했을 정도이고,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 집요하게 반대해왔다.

그는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것이며, 미국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한국정치의 혼란에서 당선이 유력해진 야당 후보의 친북·친중 입장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대선 과정에 개입하여 한반도 관리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직후에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대항해서 되겠느냐, 너희(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 외교부가 우리를 협박했다. 중국은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중화(中華) 문명국의 위상을 스스로 내팽개쳤다.

최근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점포에 대해 무자비한 폐쇄조치를 취하고, 자국민의 한국 단체여행을 제한하는 등 치졸한 보복을

감히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불법판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사군도에 대한 군사기지의 건설을 강행하여 미국 해군력의 활동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동남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인도양을 거쳐 서남아,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명대(明代)의 정화(鄭和)라인을 복원하려고 있다.

동북아와 중국의 패권전략은 보다 복잡한 구도를 가진다.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CO)와 러시아와의 전략적 군사 협력으로 대륙 군사연합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 시안(西安)을 기점으로 한 일대(一帶) 정책은 서북방에 대한 중국의 대륙제패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륙 전략은 동맹국 북한이라는 완충지의 유지에 만족하지 않는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존재와 주한미군을 중국의 대륙제패의 완결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끌고 일본과 호주가 따르고 있는 해양세력의 대륙 압박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가열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이다. 시진핑은 6.25 전쟁 직전 미국의 에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선언을 역이용하려하는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한국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넣어보자는 속셈인 것이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와 야당의 인식과 태도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초기 우리 외교는 중국의 이러한 지정전략(geo-political strategy)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시진핑의 한국 포섭 전략에 말려들은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천안문 망루에 오름으로써 아무런 외교적 실익도 얻지 못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신뢰만 잃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친북·반미 성향의 한국 야당 세력의 사드 배치 반대 공세가 점증하였다.

중국은 이를 이용해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쌓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우의(友誼), 그리고 주권독립이라는 국제정치규범을 무시한 채, 고압적 내정간섭과 치졸한 보복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우리의 분열을 획책하는 간계(奸計)를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국제질서 급변기의 격랑에 휩쓸려 들었다. 19세기 영국과 러시아(독일)의 제국 경쟁, 1945년 미국과 소련의 세계 쟁패에 이어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먹잇감이 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우리의 국내정치는 세계정치의 소용돌이를 무시한 채,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한 무분별한 권력 쟁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내우는 외환을 부르게 마련이다. 5월 9일 선거는 한미동맹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후보가 선택되어야 한다. 친북, 모화숭중(慕華崇中)의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한민국의 운명은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사드문제는 한국을 자국세력권에 넣으려는 속셈 친북세력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문제

전면화하고 있다. 이 보복 조치들은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이아니라 전체주의적 공산정권에 지나지 않음을, 그리고 몸체는 거인이 되었으나 외교적으로는 치졸한 난쟁이에 불과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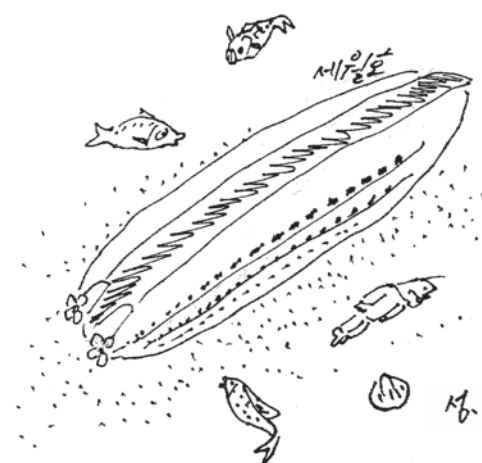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안보에 대한 주권적 결정에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중국의 속내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전략적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진핑 집권 이후의 중국의 국가전략은 현대화 초기의 일국적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선 제국적 패권투사의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시진핑이 내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대륙과 해양의 팽창주의를 의미하고, 제2도련선 선언은 미국의 태평양 영향권에 대한 균점(均霽)의 요구이다. 중국은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지정학적 세력권의 확장으로 미국의 단극적 패권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질서는 단순히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블록 대 블록의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블록 간 경쟁에서 시진핑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현상변경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한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흡인함으로써 미국과 해양세력의 대륙진출 기도를 제어하고 중국 봉쇄 전략의 실효성을 저감시키려하는 전략이다. 이를 보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중국은 ‘역에치슨라인’(reversed Acheson line)의 구축을 적극화하고 있는 것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편집위원)



아 세월이여...

사활의 고비 긴급진단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여·야 간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때나 어느 나라의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국가를 보전하려는 애국적 유권자와 국가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구시대적 민족지상주의의 가면을 쓴 종북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전자(前者)는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멸망하고, 후자는 저도 다시 권토중래(捲土重來)할 힘과 조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애국진영과 반(反)국가세력의 절체절명의 대결이요, 싸움이다. 국가의식이 결집된 유권자들이 만약 ‘민족’을 내세우며 공산주의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건 죽음의 길이다.

민족이라는 당의정(糖衣錠)을 씌운 공산주의자들은 외세에 굴종 말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김정일 간에 합의한 반(反)헌법적 6·15 선언(연방제 통일)과 이를 추진한 2004년 10월 4일의 노무현-김정일 간 합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한다. 당연히 그들은 북핵에 대비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반대한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국가 보안법도 없애고, 해산된 통진당도 재생, 부활시키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4반세기 전에 김영삼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갈파한 ‘어떠한 동맹보다 민족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이다. 특히 광화문에 촛불 들고 등장하는 배부른 돼지 같은 젊은이들은 몇도 모르고 환호할 것이다.

‘민족’ 다음으로 흑세무민(惑世誣民)의 낱말은 ‘민주’이다. 정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나 개인은 ‘민주’를 내세우지 않는다. 반(反)민주적인 사람들일수록 민주주의 당의정을 씌워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 전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민주라는 이름을 잘 쓰는 한국의 정당들이다. 그들은 반민주적이며, 반인민, 반인권을 실천하고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위인(爲人)이 지금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되려 하고 있다. 그는 “위싱턴보다 평양 먼저 가겠다”고 버르고 있다. 그는 사드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도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밝히지 않는다. 경험도 지식도 없는 젊은이들이 그냥 듣기 좋아하는 무책임한 구호를 그는 떠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라는 둘째 치고 ‘나 자신’이 어떤 상황

이제 한달 남짓...대한민국의 길 선택하는 날

보수냐 진보냐, 갈림길에



이도형
본회 회우
前 한국논단 발행인

제19대 대선 격돌 촛불 狂禍門 여나

‘민족’ 다음으로 흑세무민(惑世誣民)의 낱말은 ‘민주’이다. 정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나 개인은 ‘민주’를 내세우지 않는다.

에 직면하게 될지 우리 유권자들은 생각할 때이다. 특히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는 데 큰 기여를 한 현역 언론종사자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평양 먼저 가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되었을 때의 상황을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새 정부가 미국에 대해 사드배치철폐를 요청하면 미국은 이에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곧이어 미군도 철수할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작전권도 돌려줄 것이다. 동시에 1954년 이래 63년 동안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와 경제를 살려준 한미동맹도 파기될 것이다.

옛그제 다녀간 미국의 틸라슨 국무장관의 대북강경 메시지는 남북한 양쪽에게 던진 경고였음을 알아야

아비규환을 이룬다. 거리의 크고 작은 가게들은 명절 때 철시킨 것처럼 일제히 문을 닫는다. 그 많은 차들도 다 어디로 갔는지 거리는 한산하며 주유소도 일제히 문을 닫는다.

국제공항만이 북적댄다. 탈국(脫國)행렬은 끝이 안보이며, 항공사마다 만석(萬席)이라며 표는 매진됐다고 한다. 공항에 몰려든 수십만명은 허탈하기만 하다. 1975년 4월 30일 자유베트남이 망하던 날까지 사이공의 탄손뉴트 공항이 그랬다.

인민군이 곧 서울에 입성한다는 입소문이 번지고 있다. 비행기나 배를 못 타면 인민군에게 잡혀 죽는다. 용케 살아남는다 해도 수용소로 가야 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물려준 유산(자유민주주의와 해양 문화·문명)은

장대행이 헌법(제8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反헌법적 판결을 내린 것은, 단정하고 깔끔하고 의연한 해양문화권의 여성 대통령을 그 직(職)에서 내쫓았다. 참으로 우악스럽고 사나운 대륙적 포악스러움의 과시였다. 그 과시와 더불어 광화문(狂禍門?)의 무지한 군중폭력이 그 우악스러운 선택을 환호하며 지지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치밀하고도 방대한 계략의 결과였다. 현대판 오딧시우스의 ‘목마(木馬)의 계략’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그것은 지난 70여 년 동안 무력(武力)으로, 심리전으로, 또는 온갖 계략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조선로동당’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박근혜는 계략에 넘어진 것이다.

박근혜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는 대한민국을 타도하려던 통진당을 해산시켰고, 핵과 미사일개발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해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法外勞組)로 실질적인 불법화하고, 교과서를 국정화(國定化)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절감한 ‘조선로동당’이 움직인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그 숨은 하수인(下手人)들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 다만 하수인의 하수인격으로 몇도 모르고 날뛰 언론매체들, 사법부와 검찰일부, 그리고 결정적 역할을 한 국회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은 국가이념(레종데타·국가존재 이유)을 저버리는 자여서는 안된다. 우리의 국가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이걸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주한미군·한미연합사령부·사드 배치·국가보안법 등을 필요로 한다. 이걸 부정하는 자는 공산주의자 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서야 되겠는가?

그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안된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왜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70년 시험 끝에 망

한 공산주의를 뒤늦게 선택하려 하는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관이 뚜렷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방법은 있다. 태극기 집회에 모이는 전국의 애국자들을 규합, 조직하는 것이다. 이미 그 태동은 시작되고 있다. 공산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수호하려는 모든 사람이 여기 모여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은 시작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대통령 뽑아 안보, 국리민복의 체제 확립해야

한다.

둘째,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자본은 일제히 철수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량(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 등 재벌기업들은 광우병 걸린 황소처럼 맥없이 주저앉을 것이다.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이나 그 동조자들은 환호할 것이다.

셋째, 외국자본들이 썰물처럼 사라진 다음 대·중·소형 마트의 진열대는 텅텅 비게 된다. 매점매석(買占賣惜)현상이 사방에서 일어나 시장마다

69년만에 종언(終焉)을 고한다. 법치(法治)와 인권이 존중되고 언론자유가 보장됐던 해양문화권에 적응 못한 한국인들은 도로 독재자가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마구 휘두르는 우악스럽고 비문명적인 인권말살의 대륙문화권으로 회귀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길이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비극의 막다른 골목이다.

머리말이도 풀지 못한 대륙문화의 상징 같은 꼴사나운 여성헌법재판소

원로기자
정국진단

태극기 집회, ‘국민저항’ ‘제2건국’ 불복선언

헌재심판, 국민의 애국심까지 탄핵했다

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 파면이후 대선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
민국 70년 헌정 사상 최초
로 헌직에서 파면됐다.

국회의 잘못된 탄핵소
추장에 근거한 현재의 판
결은 사실오인·심리미
진·법리적용 잘못 등으
로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
고 법치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래서 탄
핵결정이 ‘위헌 쿠데타’
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시민에 의해 현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직무유기, 직

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
찰에 고발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가 벌어졌다. 박영수 특검도 내란선동

참
석
자

이병대(회장)
이향숙(사무총장)
박석홍(편집위원장)
최명우(편집국장)
김광섭(편집위원)
서옥식(편집위원)

유자효(편집위원)
유한준(편집위원)
육정수(편집위원)
장석영(편집위원)
장석훈(편집위원)
조희곤(편집위원)

• 일시 : 3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 본회 회의실

• 정리 : 서옥식 편집위원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현재의 심판으로 모든 혼란과 갈등
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했지

만, 지금 수도 서울의 심장부 세종대로
를 남북으로 갈라 북쪽은 박근혜 구속
을 외치는 촛불, 남쪽은 탄핵무효를 주

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이
어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북
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사
드(THAAD: 고고도 미사
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한미 FTA 재
검토 문제 등 건국 이래 최
대의 내우외환 위기에 직
면한 상황에서 5·9 대선
정국을 맞고 있다. 새 대통
령에 주어진 대내외 환경
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
다. ‘大韓言論’은 탄핵정국

을 되돌아보면서 현재 심판의 문제점 등
을 재점검하고 탄핵 이후를 집중 조명하
는 편집위원들의 방담회를 개최했다.

탄핵심판 결정문 치명적 법리 결함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 대
통령 탄핵소추장이나 현재의 탄핵 결
정문은 법률문서가 아니라 각본대로
짜여진 일종의 정치적 규탄문이나 소
설 같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헌재는 법
률문서의 요건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추장을 각하했어야 마땅한데
도, 13개의 탄핵사유를 5개로 재구성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는 이
를 성실히 따랐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스스로 소추장을
새로 작성하고 심판을
한 셈입니다. 먼저 국회
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
소추장의 문제점부터 살
펴볼까요.

▲국회 300명중 234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중대한 탄핵소추장을 만들면서 자체
증거조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검찰 공
소장을 베끼고 가짜와 진짜가 뒤범벅
이 된 신문기사들을 ‘표절’했습니다.

▲헌재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
단 설립과 관련한 ‘뇌물죄’를 기업의
‘재산권침해죄’로 죄명을 바꾸도록 하
는 등 적지 않은 부분을 수정해 제출
토록 코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는 국회가 재작성한 탄핵사유서를 ‘준
비서면’이란 이름으로 헌재에 보내면
서 헌법 제65조 ②항에 규정된 재의결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절
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삼권분립차원에서
국회가 한 일을 관여할 수 없고, 국
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고 했습니
다. 삼권분립을 주장하려면 요건을 갖

추지 못한 소추안을 각하하면 될 것을
국회에 재작성하라고 요구한 것 자체
가 삼권분립의 위배입니다.

▲헌재는 특검이 중요하게 다뤘던
대통령의 삼성관련 뇌물수수 혐의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최순실)
씨 국정개입(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에 집중하
면서 여기에 국가기밀 유출, 그리고 이
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 임하는 ‘불성
실한’ 자세를 한 덩어리로 묶은 뒤 이

인용된 것입니다.

▲헌재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시
간에 쫓겨 판결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리처드 닉슨 美
대통령의 경우 탄핵선고에 앞서 사임
했지만, 탄핵절차가 2년에 걸쳐 진행
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인에 의한 재판
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

된 대면조사 전에 대통령의 소명이나
반론도 들어보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
으로 단정해 발표해버렸습니다.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
니다. 사실이 이러하더라도 위에서 지
적한 3가지 사유를 탄핵 사유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며, 대통령에 대한 헌
법의 불소추 원칙과 피의자 변호권 및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월권이며
무리한 법리적용입니다.

▲헌재는 최순실의 국정개입 그 자
체보다도 이후 대통령
이 보여준 수사에 대한
불응을 헌법수호 의지
가 없어보인다고 판단
했는데, 이는 다분히 자
의적인 판단이라고 여
겨집니다. 헌재가 결정
문에서 밝힌 ‘대통령으

사실오인·심리미진·적용 잘못 등 오류투성이 허위 편파보도 촛불시위 부추긴 언론도 한 몫 차지

를 총체적으로 판단, 대통령이 대의민
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며 파면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결에는 사실
오인, 심리미진, 법리적용오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
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
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헌재는 국민이 정당한 주권행사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해괴한 이유(최순실의 국정개입,
국가기밀유출, 검찰 및 특검수사 불응
등)로 파면했습니다. 5개의 탄핵사유
중 중요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사
유로 파면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은 법원의 판
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소법 제23조의 규정이 있는 만큼 평결
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7인 이상 재판할 수 있
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
법재판소법 제22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되
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2014년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재판관 등 4명은 8인
재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런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 황
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헌재는 조사 불응과 청와대 압수
수색 거부를 중요한 탄핵사유로 판결
했는데, 이 또한 사실 오인입니다. 대
통령은 지난해 11월 말, 검찰과 대면
조사를 계획중이었으나, 검찰이 계획

로서의 헌법수호 의지 결여’의 근거로
제시된 대통령의 ‘행위’(검찰과 특검
수사 불응 등)들은 2016년 12월 9일
자로 단행된 국회 탄핵소추 결의 이후
에 이뤄진 것으로, 이것을 파면의 중
대 원인으로 삼은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법리적용의 잘못으로, 탄핵 결
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
입니다.

▲헌재는 파면 결정문에서 “피청구
인(대통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私益)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최서원의 이권 개
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
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보수 붕괴...진영 간 정책대결 실종

긴급방담

‘장미 대선’ 국내외정세 어느때보다 위중

6면에서 계속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私益) 추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판단에 있어 현재가 확정적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씨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의 결과와 현재의 사실인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 제기될 문제점과 초래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한류와 스포츠 발전 등 문화융성을 위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50여 기업으로부터 모두 774억원의 돈을 출연받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합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이번 사건보다 더 큰 친인척 부정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재임중 탄핵되지 않았습니

다. ▲현재는 대통령의 한류 융성을 위한 미르재단법인 설립과 관련, 차은택(전 미르재단 이사,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림)의 현재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 인용했습니다. 차은택은 현재 증언에서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서원으로부터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그 때, 최서원은 외국 출타중이어서 한국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하지 않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습니

다. 이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 재판이자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인 셈입니다. 현재는 판결문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으며 ‘국민의 신임 배반’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현재 결정문의 치명적인 법리결함입니다. 적어도 결정문에 ‘국민의 신임 배반’ 운운(云云)하려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밀리에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송금해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이게 했다는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영토선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우리 영토선이 아니라며 김정일에게 북한이 이용하는 데 찬성하는 정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선거판세, 야쪽으로 장세 기울어
새정부, 조약 등 국정운영 혼란 예상



본회 원로기자 편집위원들이 모여 탄핵·대선정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현재는 검찰의 공소장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 이같이 판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허위인데도 현재는 공소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

다. 확인결과 현대자동차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2년 전인 지난 2010년부터 최서원과 관계없이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온 것이 사실이었

고, 현대자동차측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1월 2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적’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동언론, 정치검찰, 반역국회, 촛불집회를 주도한 종북좌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제기, 허위·왜곡·편파·선동보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언론이 탄핵정국의 주범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저녁 8시 jtbc는 출처가 불분명해 조작혐의가 짙은 ‘최순실 태블릿 PC 분석내용 폭로’라는 것을 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총성을 울렸습니다. 이 태블릿 PC 보도 후 선동적인 언론들은 jtbc에 뒤질세

SNS 활용 흑색선전 확산 등 네거티브전 기승 정치공학 난무 불투명 대선정국 깜깜이 양상

같은 발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

다. ▲안창호 재판관은 현재 결정문 보충의견 결론부분에서 근거 없는 성현의 말, 맥락이 어긋난 플라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개그콘서트’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옛 성현의 말이라며 “범금봉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이라는 것을 인용했고, 이것을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라고 풀이했습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지난 3월 22일자 ‘안창호 재판관, 격정에 못 미친 교양’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재판관의 교양수준을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 시중에는 ‘탄핵 5

라, 흥미위주의 허위 보도들을 사실인 것처럼 앞다투어 쏟아냈습니

다. ▲촛불시위에 기름을 부은 허위보도는 수도 없이 많아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과의 공동정권▲정유라가 박근혜 딸 ▲최순실의 친언니 최순득이 박 대통령과 성실여고 동기동창(최순득은 성실여고를 다닌 적이 없다)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최순실에겐 아들이 없다) ▲최순실이 2016년 5월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시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했다(탑승자 명단에 없다) ▲‘통일대박’은 최순실의 아이디어이다(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책에서 따온 표현) ▲미국이 한국의 촛불시위를 지지했다(오역에 의한 오보) ▲주한 미대사관이 촛불집회 ‘1분 소동’에 동참했다(미 대사관측 공식 부인) ▲청와대가 발기부전치료용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고산병 치료용으로 구입했고, 전량 보관중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희와 밀회했다(정씨는 당일 무속인 친구와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은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 국회의 탄핵소추결정, 그리고 현재의 탄핵결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거의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

다. 특히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탄핵정국을 키운 뇌관임에도 불구하고 입수 경위와 출처, 최순실의 소유가 맞는지, 내용의 조작여부 등의 확인취재에 소홀했고, 검찰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아무런 토도 달지 않았습니

다. 대통령 변호인측과 태극기 집회에서는 “국정농단의 주범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 일당이다. 이들을 구속 수사하라”는 주장이 요란하게 나왔지만, 특검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된 지 일주일이나 경과된 지난 3월 17일 ‘고영태 녹음 파일도 이제 수사해야 한다’는 한 선임기자의 칼럼에서 검찰은 이제 가장 원치 않는 수사도 해야 한다고 실수든 고의든 검찰이 덮어버린 ‘고영태 녹음 파일’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칼럼은 조선일보가 고영태 녹음파일이 검찰에 불리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보도를 해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

다. ▲언론들은 광란에 가까운 촛불집회를 ‘평화적인 축제’라며 찬찬을 아끼지 않았습니

8면에 계속

‘8:0 전원일치’에 의구심… 후유증 심각

뇌관 태블릿PC는 왜 제외했나

정유 탄핵 주역

탄핵 현재
선동 언론
정치 검찰
반역 국회
종북 죄파

7면에서 계속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형상, 그리고 이들을 무덤에 파묻는 의식, 어린 중·고교 학생들이 ‘혁명정권 이뤄내자’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장면 등등…혁명을 구실로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정권의 킬링필드 광기(狂氣)를 방불케 하는 인간에 대한 잔혹성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데도 찬양과 미화 보도 일색이었습니다. 야당인사들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촛불집회에 참석해 이런 장면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촛불집회 현장에는 특히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남파·암약했다 처형된 간첩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의사(義士)·열사(烈士) 칭호를 붙여놓았는데 어느 언론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촛불현장에는 반체제적 종북주장들 예컨대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이뤄내자 △거대한 횡포로 보수세력 불태우자 △서울 한복판에서 미제 침략군 몰아내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유엔사·한미연합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이석기를 무죄 석방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철회하라 △범민련·한총련 등 진보적 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하라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 석방 △국정원·기무사 등 보안기구 해체 △사드 배치계획 철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구호가 난무했지만,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극소수 우파 인터넷 매체를 제외하고는 언론은 이런 주장들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하야·구속을 외치며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배후조종하는 세력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입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등 260여 단체(산하 또는 지부 조직까지 포함하면 1,500여개)가 들어가 있으며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과거에도 매항리 미군 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와 미군



보수 VS 진보, 촛불과 태극기의 극렬한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고 있다.

장갑차 여중생(효순·미선) 치사사건 촛불집회, 맥아더동상 철거시위,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반대시위,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추모 촛불문화제, 광주병 촛불난동 시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에 빠짐없이 참가해온 종북좌파단체인데도 우리 언론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처럼 편파·왜곡·과장·조작 보도를 했음에도 정정 기사를 내보낸 곳은 1~2개 언론사에 불과합니다. 오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

양측이 집회를 자제하자”고 제안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하나같이 촛불집회는 대대적으로 보도한 반면, 태극기 집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 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언론이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왜곡 보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언론계 전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입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19대 대선일이 5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위 ‘장미대선’의 날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보수 진영이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경기장은 더욱 가파르게 야권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대선구도와 함께 선거 이후의 예상되는 혼돈상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선구도를 보면 원내에 진출한 5당이 각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세론 속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 연합론’이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 대연합론’이 거론되는가 하면, ‘문재인 대反문재인’의 양자 대결구도까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 주도의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의 성사 여부도 이번 대선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보수의 지리멸렬로 진영간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선거는 꺾임이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책과 시대정신이 실종되고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양진영 대선후보 모두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적폐청산, 대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선의 불확실성이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 공약 점검 부실 등으로 국정운영 혼란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약 6개월)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는 여론과 정치권의 혹독한 사후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악

의 경우 정부 출범과 함께 ‘레임덕’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선 일정이 단축되면서 정상적인 후보 검증은 실종되고 TV토론회 등을 통한 이미지 선거로 흐를 공산도 커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실무근의 가짜뉴스(fake news)가 생산돼 SNS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들과 진영에서는 상대주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흑색선전 등 각종 네거티브전에 골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짧은 대선운동 기간에서 가짜뉴스의 위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됩니다.

‘위헌쿠데타’… 현재 재판관 8명 전원 피소 박영수 특검 등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당해

나 반성을 한 언론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은 또한 촛불집회는 크게 취급하면서도 태극기집회는 처음부터 무시하거나 보도하더라도 작게 취급했습니다.

예컨대 2017년 새해로 가는 길목인 2016년 12월 31일 저녁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각각 광화문과 시청 앞 대한문 광장서 열려 사진이든 육안으로 보든 태극기 집회 참가자 숫자가 많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뉴스통신사의 보도를 인용, 72만 대 1만 2천으로 보도했습니다. 태극기집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고 참가인원이 촛불 집회를 능가하자, “이제 촛불·태극기

법에 대한 역사적·철학적 통찰이나 파면 이후의 정국혼란 등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나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현재가 적시한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를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범죄였는가에 대하여 설득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광장의 분노’를 의식,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오는 정치·사회적 혼란보다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아서 오는 정치·사회적 혼란이 더 클 것이라고 예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끔찍하기까지도 합니다.

헌법재판
방청기

헌재가 헌법을 짓밟았다

2017년 3월 10일. 이날은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 최악의 날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입구 안국역 네 거리를 중심으로 주변 도로는 경찰버스로 여러 겹의 방어벽이 쳐졌다. 헌재쪽으로 나가는 2번 출구는 아예 폐쇄해 버렸다. 시위대열과 경찰 포위망을 뚫고 헌재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 무려 4~5차례의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런 통과 절차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다.

이 시각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 세력 이, 안국역 주변에는 태극기 세력이 운집해 축제 또는 항의 집회에 대비하면서 각기 '탄핵 결정'과 '탄핵 무효'를 외쳐댔다. 긴장감은 점점 더 팽팽해졌다. 헌재의 최종 선고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전 11시, 재판관 8명이 심판정에 입장하기를 기다리면서도 신경은 온통 바깥 분위기를 향해 있었다.

드디어 역사적 순간.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선두로 재판관들이 서열순으로 들어섰다. 전국의 시선이 TV로 쏠리면서 방청객과 기자들, 변호인단은 헌재 측의 '기립' 구령에 따라 일제히 일어서 재판관들에게 예(禮)를 표했다. 수십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불을 뿜으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필자는 재판관 개개인의 얼굴 표정부터 살폈다. 어느 쪽으로 선고될 것인지 감(感)을 잡아보려는 본능적 시도일까.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자 재판관들은 한결같이 입을 굳게 다문 딱딱한 표정이 역력했다. 다만 딱 한사람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은 처음부터 보일듯말듯한 미소를 띠고 표정으로 읽혔다. 필자의 선입견 때문일까. 웬지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내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다가왔다. 김 재판관은 야당 추천으로 임용된 서열 2위의 재판관. 그는 통진당 해산 결정 때 유일하게 반기(反旗)를 든 바 있다.

필자는 17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최서원(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과 국회측 및 청와대측 변호인단의 증인신문, 법리적 주장을 지켜보면서 인용 또는 기각 가능성을 초(超)접전으로 생각했었다. '촛불 민심'의 허구성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왜곡 보도, 고영태 일당의 '게이트' 조작 음성과일, 국회 탄핵의결 절차의 흠결 및 탄핵사유서 재작성 등을 감안할 때 그렇게 판단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판진행 과정을 비교적 장황하게 설명했다. "90여일 동안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

하며, 탄원서 등 자료도 40박스에 달했다" "국민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역사의 법정 앞에 선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



2017년 3월 10일,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8인의 헌재 재판관들. 왼쪽부터 조용호, 강일원, 김창중, 김이수, 이정미,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

'보이지 않는 손' 작용했나

심리(審理)의 시간적·양적(量的) 분량과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국민의 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다시 한번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다. 헌재 판단의 문제점은 바로 다음 탄핵의결 절차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대목에서 드러났다. 의결 당시 국회

도 헌재는 "국회법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위헌성의 결렬차를 묵인해주고 말았다. 이는 서두에서 "국민이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명시한 것과도 모순된다. 과연 국민이 국회의 자율권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허용했다는 말인가.

'국회에 굴종적' 헌재의 존재이유 스스로 부정 탄핵 결정 정당성 여부도 계속 진상 조사해야

의 조사도 없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했다는 청와대측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국회법에도 국회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이 최고법인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그 규정을 위헌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공소장과 신문기사의 내용이 확정된 사실(fact)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그것들을 근거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서를 작성하고, 의원들에게 사유서를 배포조차 않은 채 토론도 없이 의결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토론 생략에 대해서

청와대측 김평우 변호사가 '섞여지게 의결'라고 지적했듯이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모든 사유를 한꺼번에 표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회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의결을 크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방식인데도 역시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버렸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헌법정신은 헌재가 헌법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적출해내는 것 아닌가. 권력분립원칙이란 미명하에 국회에 대해 굴종적 자세를 보였을뿐 아니라,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조항을 외면한 사실이다. 최서원과의 관계와 재단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도 없이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행위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재벌그룹 회장들 및 전경련 관계자 등의 진술이 엇갈리는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헌재는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고 설시(說示)했으나, 이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탄핵 사유서에 없고, 국회측은 변론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형사소송 원칙인 불고불리(不告不理·소추하지 않은 사항은 심리하지 않는다)의 원칙 위반이 아닌가.

특히 결정문 후반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는 지적은 과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군사적 경제적 대북(對北) 정책,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위한 외교적 노력, 통진당 해산, 국정교과서 채택 등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헌법수호에 힘쓴 역대 대통령도 드물다. 또 청와대에는 국가보안사항에 속하는 자료들이 많은 텐데 압수수색에 쉽게 응하라는 말인가.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선고를 시작한지 21분만에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럴 수가! '탄핵인용'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는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진정으로 지킬 의지가 없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재판관 8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 또는 심판이다.

이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단체 등이 탄핵사유의 진상 및 탄핵결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국가적 사태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미디어

탄핵과정 공정한 게임이었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국론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국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았다. 한반도 주변 상황은 북핵문제와 한·중 갈등 등으로 지금 엄중한 비상 국면에 놓여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초청,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담판 을 할 예정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과열음이 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대선에 정신이 팔려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 유력한 야당 대선주자들은 이런 엄중한 상황을 알거나 하는지 염려되고 있다.

언론은 어떤가. 대통령 탄핵 보도의 소용돌이에 열중하다가 이제는 대선주자들의 하루하루 행적을 쫓아 표퐁리즘적 공약의 파편들을 전달하기에 바쁘다. 6·25전쟁 후 가장 엄중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고민을 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타개를 위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뚜렷한 다른 주체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언론과 일부 인사들은 현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아 갈 때 헌재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헌재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데서 오는 갈등과 혼란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탄핵심판 후폭풍으로 찬·반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탄핵심판에 대해 불법적으로 불복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신문시평



김광섭

본회 편집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부국장

한반도 위기상황 외면하고
대선 지지도 보도만 열올려탄핵심판 위법성 검증외면
법률적 허점 결정문은 칭찬

소설가 복거일씨는 조선일보의 특별기고문에서 “헌재 주심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탄핵심판이 반드시 형사재판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 절차와 민사소송 절차를 선택적으로 준용했다”며 이는 잘못했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법에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대해 국민들의 압도적 합의를 이루었는지 검증한 언론은 극소수 외에는 없었다. 언론과 야당은 대통령 궐위의 국정공백이 너무 길어지면 국가적 혼란이 오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일견 맞는 말 같지만, 과연 이것만이 진실일까. 유력 야당 집권 내지는 특정 대선주자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국면을 이끌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 대해 주목한 언론은 거의 없다. 고영태 일당의 수상한 녹음파일 2391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이번 탄핵정국을 기획, 조종한 혐의가 농후한 이 파일 내용을 모두 들어보고 고영태 일당에 대한 조사,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경제와 MBC 등 몇몇 소수의 언론은 이 녹음 파일을 밤새워 들어보고 고영태 일당의 맹랑하고 간교한 음모를 파헤치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과 특검, 현재는 이를 무시하고 넘어갔다. 이제 정국은 탄핵국면을 뒤로 하고 대선과정으로 접어들었다.

각 신문은 아직도 대선후보자들의 지지도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지지도는 조사방법, 표본추출, 조사기관의 신뢰도 등에 의문이 많다. 그저 조사 당시 시점에서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독자들의 관심도를 끌기 위해 대단한 뉴스처럼 지지도 조사를 크게 보도하고 있다. 과거 선거사(史)에서 보면 초반의 지지도 조사가 막상 선거에서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가 적지 않았다.

대선 표심을 둘러싼 지역구도에 대한 보도는 여전했다. 일부 신문들은 “지역맹주 사라진 대선…’영호남 대결구도’ 깨지나” “호남 결전 앞두고 호남선 탄 야권주자들” “호남서 50% 득표면 게임 끝, 야 후보들 운명 건 주말”

고영태일당 수사 촉구에 일제히 입다물어

승복을 강조한 나머지 불복하는 것이 마치 죄악인 양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각자 마음속으로, 또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불복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신문칼럼도 있었다. 탄핵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대통령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현재가 8대 0으로 대통령 파면결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현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간결하고 명확한 판결문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그 판결문이 법리적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인 것이어서 또 다른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법률가도 적지 않다.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주요 혐의로 꼽은 것이 직권남용 등으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을 위반했고, 검찰,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과연 대통령을 현재 전원 일치 합의로 파면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 탄핵 반대측의 의견인데, 언론은 이것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역사적 현재결정을 특정 현재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 서둘러야 하는지에

등 제목으로 지역 민심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했다. 지역 구도를 타파하지는 오피니언 페이지의 주장과는 상반된 기사이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치열한 검증은 이번에도 미흡하다. 그런 중에 각 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면서 후보들의 치열한 말의 잔치와 난타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경우 상대에 대한 공세가 심해지고 있다. 문 후보의 특전사 복무시절의 전두환 당시 여단장의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 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특혜 등이 논란이 됐다.

이달의 사진

북한국적 용의자

뉴스1 사진부 박정호 기자가 '북한국적 용의자' 회의 제170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스포츠북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시아 세팡 지역 경찰서로 북한 국적 용의자로

이달의 칼럼

안창호 재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의 교양 수준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모스서에서 한 구절씩을 인용하고 있다.

안 재판관이 언급한 옛 성현의 말은 ‘범금(犯禁)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고,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인의 위법보다 ‘범금(犯禁)은 하위정’은 옛 성현의 말에서 찾았는데, 한 신문사의 주필을 지낸 사람이 그 신문(管仲)의 말로 소개한 것이다. 풀이도 안 재판관(管子) 어디를 뒤져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줄 알았으나 회피하는 답변만 들었다.

관자에 범금(犯禁)이란 말은 자주 나온다. 그 금은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의 위법을 이른다. 그러면 ‘백성의 위법을 지도자가 봐주면 어떻게 된다.

안 재판관은 또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통치(統治) 내란으로 비화하여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공유형 분권제로의

안 재판관은 정치학에서 플라톤의 국가론(國家論)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열린사회의 제 전체주의 국가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포지

치적 함의가 대개는 불쾌하고 때로는 섬뜩한 것이다. 안 재판관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다. 좋은 말이지만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안 재판관이 다수 의견에 물려있을 수 있는가 불명확하거나, 맥락과 동떨어진 인용을 한 것은 헌법재판관의 교양 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18세기 말 영국 사상가이자 의원인 에드

를 탄핵소추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미국(政·maladministration)’을 불명확하다는 crimes and misdemeanors)’을 넣은 것은 동사

론보다는 버크를 읽었으면 한다. 현재가 바다 건너 탄핵심판을 탕자로 만든 범죄와 강요죄를 헌법의 재산권 보호 위반으로

이광장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자 리정철 포착 최우수상

뉴스1 박정호 기자

의자 리정철 포착' 사진으로 한국사진기자협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남 피살 사건 발생 7새째인 3월 18일 말레이
리정철이 압송되고 있다.

판관, 걱정엔 못미친 교양

결정문에 단 보충의견을 읽으면서 헌법재판관
그는 옛 성현의 말, 플라톤의 '국가론', 성경의

공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이다. "지도자가
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라고 풀이하
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 수 없었다. 이 말은 지난해 12월 탄핵정국
에 연재한 글에 중국 춘추전국시대 재상 관중
판관과 똑같다. 그러나 관중의 언행을 기록한
않는다. 글쓴이에게 전화를 걸어 전거(典據)

그러나 법가(法家)적 성격이 강한 관자에서 범
'범금공은하위정'을 관자의 뜻에 따라 해석
백성을 바르게 하겠는가'로 전혀 다른 뜻이

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 간의
시민들마저 과멸시킨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모르는 듯하다. 칼 포
제1의 적이 플라톤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퍼의 비판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국가론의 정
느낌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하수같이 흘릴지모다'는 성경 구절도 인용했
는 나라의 현재에서 특정 종교의 경전을 인용

데도 굳이 보충의견을 달겠다고 고집해 전거
한 덕분(?)에 재판정 법대에 근엄하게 줄지어
다. 내게는 이것이 흥미로웠다.

드먼드 버크는 인도 총독 워런 헤이스팅스
이 헌법을 만들 때 탄핵 사유에서 '실정(失
이유로 배제하고 '중대한 범죄와 비행(high
시대 버크의 영향이다. 읽는다면 관자나 플라

측면이 있다.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유인 뇌
로 바꾸도록 한 것이 그렇다. 어느 나라든 공
유무죄를 판단하지, '일부러' 바뀌 될 명확한
라고도 하지 않고 막연히 재산권 침해라고 하
출이 엉망인 해답이었다.

[3월 22일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데스크들이여, 게이트 키퍼하라

방송시평



유자효

본회 편집위원
전 KBS 파리 특파원

노조는 제작거부 칼 빼들여 데스크 기능 실종 프로 양산

예산 절감의 토크프로그램 탄핵사건으로 파괴력 발휘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주로 20-30대의 작가, PD,
기자들이다. 편성과 제작 방향은 40대
이상의 간부들이 정하지만, 실무는 젊
은 제작자들이 하는 것이다. MC 선정
은 타사와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는데,

달라졌다. 과거에는 프로그램 기획에
서 제작. 방송에 이르기까지 데스크가
철저하게 관여했다. 그런데 이 데스크
기능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여기에는
채널의 증가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
고,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늘어난 탓
도 있지만, 제작 거부라는 칼을 든 방
송 노조의 역할도 크다. SNS 시대에 접
어들면서 부하들과 불편한 상사는 여
론 공격을 받고 심리적 상처를 입을 수
도 있다. 따라서 데스크 기능이 실종된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아나운서나 방송기자가
마이크 앞에 서기까지 철저한 언어 훈
련을 받아야 했다. 국가 기간방송 KBS
의 방송인들은 표준 한국어 교육의 선
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부산 출신
인 필자는 견습 시절에 "사투리
를 고치지 않으면 방송할 생각
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엄한
경고를 들었다. 그 뒤 경상도 사
투리를 고치기 위해 무진 고생
을 했다. 지금도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애쓰는
것이 그때 그 훈련의 결과가 아
닐까 한다.

그런데 지금의 종편을 보면
표준 한국어에 관한한 형편무
인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고정 출연자가 경상도, 전라
도 사투리를 쓰는 것은 말 할 것도 없
고, 심한 사투리를 쓰는 진행자도 있
다. 게이트 키퍼 기능이 실종된데다가,
아무나 방송에 나와 아무 소리나 해대
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이다. 방통위원
회, 방통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
무가 좋은 방송을 국민들에게 제공하
도록 하는 것일 텐데, 그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치권과 방송계를 들락거리는 사람
들이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정작 방송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기관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엄혹

아무나 방송에 나와 아무 소리나 해대는 시대

사에 항의하고 패널 교체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통심의위에 제
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종편사들이 보도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고 그 가운데서 토론 프로그램
을 주로 편성하는 데는 경영상의 이유
도 있다. 종편 초기에는 방통위도 이를
전문 편성이라며 묵인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
건이 터지면서 전 종편사들이 경쟁적
으로 집중 폭로에 나서자,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여론을 먹
고 사는 미디어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
서운가는 최근 5년간 보여준 한국 종
편의 실태가 반면 교사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방향과 맞아야 한다. 그런
데 기자나 PD, 작가가 자기들과 성향
이 맞지 않는 출연자를 부를 리 없다.
그러니 시청자들의 불만이 아무리 높
아도 출연진들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은 그 위의
세대들과 문화가 다르다.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다르다. 이들은 초등학교에
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가장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전교조 교사들의 세례
를 받은 세대들이다. 요즘 가정에서 부
모도 자녀 설득을 제대로 못하는데, 하
물며 직장에서 어느 상사가 부하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갈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 방송사 문화가 과거와

한 시기이다. 방송이 제멋대로 굴러가
게 버려둘 수는 없다. 더욱이 선거를
둘러싼 가짜 뉴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 방송이 제대로 기능
한다면, 좋은 대통령을 찾아내는 데 결
정적으로 기여한다면, 대통령 탄핵에
이어 방송은 한국 현대 정치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이다.

방송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데스크
들이여, 게이트 키퍼하라! 용감하
라! 시청자들의 신뢰를 찾도록 노력하
라. 이것은 그대들의 의무를 완수하는
길이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는 애국하
는 길이기도 하다.

대통령 하야-유고-파면 악순환 언제까지...

국가 위에 정파, 정파 위에 개인...종착역 어디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직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세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현재의 대통령 탄핵 인정이 박 대통령 한 명의 불명예나 불행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있다.

건국대통령 하야, 산업화 대통령 유고에 이은 현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서 '체제 탄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고발하는 침묵하던 지식인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3일 "2017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이 정면 대결하는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지식인 연대를 결성한 한국자유회의는 3월 23일 "히틀러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전복은 합법적이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체제 탄핵'이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대통령 파면이 '국회 독재'를 정당화시켜주는 위험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자유회의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 선진화법'을 인정함으로써 헌정 질서 복원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던 현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서 '적법 절차'(due process)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3권 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한 '국회 독재' 정당화 판결을 '국회 자율성 존중'이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판결에도 일부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내고 법원을 떠났었다. 그런데 현재 8명의 재판관들은 이번 탄핵 사건이 내란죄와 외환죄와 관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 없는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북한 '수령 전체주의 체제의 일상화' 모방 현상이라고 한국자유회의는 지적했다.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전체주의적 민중주권론을 내세운 탄핵 선동 세력에는 "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힌 한국자유회의는 현재가 탄핵 촛불 집회 조직자들의 정제와 정치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현재 재판관 8명 민형사 소송

현재 결정문과 현재 재판관들의 지적 수준에 대한 지식사회의 당혹감과 현재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우중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현재 재판관 8명 전원을 민·형사 고발했으며 송평인

'체제탄핵'의 길로 가는 '대통령 파면'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3월 22일 "안창호 현재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단 보충 의견을 읽으면서 헌법재판관의 교양 수준을 생각해볼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건국70년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을 돕는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정치 법조 언론의 후진성이 현재의 대통령 파면 사태와 수준 이하의 현재 재판관 겸



박석홍
본회 주필
전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저야 한다는 논리로 3.15 부정선거 책임을 저야 하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 선거를 공모하지 않았으며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면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이 1960년 4월12일 국무회의록에서 확인되었다. 1957년 6월부터 3년간 국무원 사무국장이었던 신두영 전 감사원장이 4.19 30주년이 되는 1990년 4월 19

'국회독재 정상화' 인정해준 헌법재판소
논설위원, 현재재판관 교양수준 의문제기
'만장일치' 결정... 북한 전체주의 연상돼
언론, 탄핵의 진실 밝혀 편파 오명 씻어야

증까지 하게 된 것 같다. 건국 대통령의 하야, 박정희 대통령의 10.26시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세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가 빌미가 되었지만 모두 한 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 각축과 극렬한 국내정치 정쟁 속에서 벌어졌다.

세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는 정치 공백으로 인한 국익 손실과 정상배들이 조작한 후진 정치를 바로 보지 못한 국민적 각성과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했던 언론 법조 학계의 반성이 절실하다. 뼈를 깎는 파워엘리트의 혁명적인 개조 없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회복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선동 부대엔 법원판결 반국가단체도 부패세력들 '적폐청산'하는 대통령 역공

역사의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하야는 3.15 부정선거 30년뒤 4.19 전야 3년의 국무회의록 발굴·미국외교문서 공개·관련인사들의 증언·정치학계의 연구·언론의 탐사보도로 베일에 가려졌던 일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 중 하야는 권료의 배신·미국의 압력·언론의 정파주의 등이 크게 작용했음이 밝혀졌다. 대통령으로써 국정 전반을 책임

일 경향신문에 공개한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이 마지막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세 번이나 하지만 내무장관이 "마산이 좌익분자가 노출 정리되지 않은 지역이라 공산계열 책동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를 하고 문교·국방장관이 내무장관 보고에 동조해 이 보고에 기초한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돼 학생 데모가 격화 되었다. 1958년 1월부터 1960년 7월까지 국무회의를 기록한 신두영 전 감사원장(1918~1990)은 "3.15대통령선거 1년 전 1959년 국무회의 1년 안건 1288건 중 법제가 222건으로 17.2%, 산업

경제가 219건으로 17%, 재정 물가가 169건으로 13.1%, 외무가 102건으로 7.9%, 언론 홍보가 87건으로 6.8%, 국방치안이 84건으로 6.5%, 정치는 68건으로 5.2%였으며, 5.2%의 정치안건에도 3.15 부정선거 모의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왕조체제의 백성, 일제 식민치하의 신민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만든 제 1혁명을 완수한 이승만 대통령은 4.19전야 3년간 전후 처리 과

정에서 전근대 농업사회를 탈피하는 산업화 기초를 다져 군사 정권의 산업화 제 2혁명의 디딤돌을 놓았다.

산업인력 양성, 경제 개발 계획 수립, 아파트 건립에 의한 주택 개조 등 도시화, 산림 녹화, 무역, 군 해외 파병, 항만 시설 조선 설비 정비, 관광개발, 도로정비, 국가보위 강화 등 근대화 모색이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였다고 신두영 전 감사원장은 증언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산업화 제 2혁명은 미완성이었지만 이대통령이 지도한 인재들이 박정희 정부에 참여해 제 2혁명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재조명

6.25전쟁 중 분단 상태의 종전을 서두르는 미국의 국익과 통일을 이루려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충돌해 벌어진 부산정치 파동, 한미방위조약 체결 전 한국군과 미군의 쿠데타 모의,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과 이젠하워의 일본 중심 동북아 지역 전략 충돌 등 한미간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음을 김일영 교수·조용중 전연합통신 사장 등이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의 10.26참변에 대해서도 서울주재 전CIA 책임자의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협박성 발언과 미국 대사와 김재규·김영삼과의 10.26 직전 박 대통령 비방대화가 논란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이면사도 곧 밝혀지겠지만 박 대통령의 정치 미숙과 인사 실패가 이번 사태의 원인인 것 만은 분명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10.26참변의 도화선이었던 부마사태와 관련 있는 부산 출신 YS추종 정치인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갈등이 탄핵사태로 발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 공모직인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국사편찬위원장,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장, 동북아재단 이사장, KBS 이사장, 장관, 현재 재판관, 총리, 검찰총장 등 요직 인사 실패에 이어 지속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물 선택으로 배신자와 간신단 양산했다.

종북 세력 척결과 부패 청산에 손뚱으나 미완성으로 끝났다.

항간에는 부패 세력이 결속해 박 대통령을 역공격했다는 소문도 있다.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진실을 정리해 역사의 반면교사로 제시하길 바란다. 박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공백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반민족적 전체주의 체제' 도전과 중국·일본·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으나 국회·법조·언론·학계는 이런 모순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대선 유력자에게 줄서기 경쟁만 해 한심스럽다.

쇠퇴하는 일은 있어도 패망은 없다

회원포럼

보수의 길은 언제나 초심

다수집합 정당의 파산일 뿐
기반튼튼 보수는 살아있다
행태 결코 강경해서는 안돼

보수는 언제나 정해진 「보수의 길」이 있습니다. 보수에게는 애초에 정해진 그 길 밖에는 없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수의 길은 본래 만들어진 그 「본연의 길」로 돌아가는, 바로 「초심(初心)의 길」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보수의 길은 성(盛)하다 쇠퇴하는 일은 있어도, 폐멸하거나 패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수는 흥하다가 좀 망하는 듯한 일은 있어도 완전히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수는 인간 삶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또 정치·경제·사회생활의 주축(主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 보수는 가라 앉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와 혹은 보수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건재(健在)합니다. 그 기반은 두텁고 튼튼하고, 그 지향하는 바는 건전하고 바르고 확실합니다. 물론 진보주의자도 건전한 상식을 갖습니다만, 그 수는 보수주의자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수에 어떤 이상(異常)이 있어서 「보수는 위기다」, 「보수는 망했다」 하고 떠들니까. 그 또한 명백합니다. 보수를 대변하는 보수정당이 파탄(破綻)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 또한 간단합니다. 보수기반이 튼튼하면 그 기반 위에 새 건물을 짓듯 새 정당을 세우면 됩니다.

보수 본연의 행태(行態)

역사상 보아온 보수 행태(保守行態)의 특징을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유연(柔軟)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수주의자는 결코 강경(強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유능제강(柔能制剛)이라 했습니다. 이는 경험칙(經驗則)입니다.

둘째로 여유(餘裕)입니다. 여유는 마음이 넉넉하고 행동의 폭이 넓은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의 값어치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 있는 사람이 긴 안목을 갖습니다.

특히 정권(政權)에 관한한 보수의 여유는 「주고 받는 것」을 지향합니

다. 그래서 대체로 한 10년 단위로 정권을 주고받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보수(補修)입니다. 「보수(保守)는 보수(補修)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수가 진보보다 스바이블(survival)능력이 큰 것은 그리고 지속력이 더 강한 것은 이 보수(補修) 때문입니다. 상황 통찰력을 갖고 상황 변화에 맞게 스스로 변신(變身)하면서 새로운 규칙·규제,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대로 시대정신을 알고 그 시대정신에 맞게 정책을 짜가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맞는 보수(補修)는 한마디로 「One in, Two Out」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규제 하나 만들면 낡은 규제 두 개를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좌파와 차이입니다. 진보·좌파는 먼저 국가와 정부를 책하고 사회를 탓하고, 그리고 제도와 구조시스템에 모든 잘못을 돌립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잘못, 그리고 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보수 본연의 의미

보수의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이요 한 가지 의미 이지만 설명을 위해 4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념적 보수

첫째로 경험주의: 보수주의자는 경험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빛나는 두뇌와 냉철한 이성에서 나오는 어떤 발상 어떤 정책도 그냥 상상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에서 현장(現場)을 가장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식은 배움에서 얼마든지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경험해봐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축적된 것이 역사이고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밑뿌리째 바꾸려 하면, 반드시 구조 반동(structural reaction)이 오기 때문입니다. 구조반동이 오면 개혁은 완전히 무산되고, 옛날 구체제보다 훨씬 더 못한, 더 견디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여러 혁명들인데, 영국보수주의자들의 말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국민이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개혁하자고 일으킨 혁명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고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2) 제도적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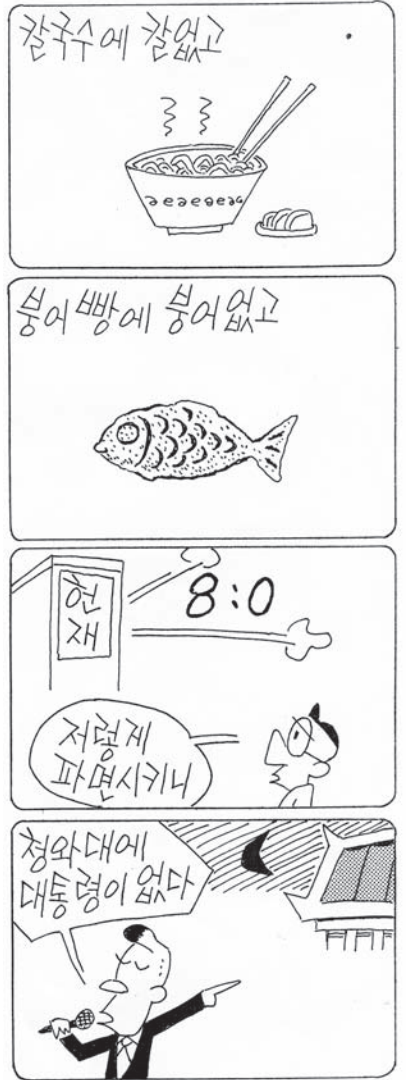
보수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국가 운영의 제도를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념적 보수처럼 그렇게 정해지고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 그 장소 논리에 맞게 다시 짜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의 제도적 보수는 첫째로 국가안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산업화 성장입니다. 산업화는 기존의 그것임은 물론이고 4차산업화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시장경제·기업경쟁의 자유이며 자율화입니다.

△심리적 보수

심리적 보수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보수입니다. 「심리적」이라는 말에서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갖는다는 뜻도 됩니다, 예컨대 ①먼 것보다는 가까운 것(먼 일 가보다는 가까운 이웃). ②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지식·사람·지역 등) ③생소한 것(낯 설은 것)보다는 친숙한 것(낯 익은 것) ④서툰 것보다는 익숙한 것 ⑤새것보다는 오래 된 것 ⑥풀려 있는 것(loose) 보다는 묶여 있는 것(fastened) ⑦넘치는 것(over) 보다는

오늘의 나대로

이홍우 (본회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다. 글자 그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자들(노블레스)들은 도덕적 의무, 도덕적 행동(오블리주)을 다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 때 도덕적 의무 도덕적 행동은 실제적으로는 「희생적 행동」입니다.

그 희생적 행동은 첫째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적나라하게는 목숨을 바치는 희생적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반드시 병역 의무를 필하고 세금도 훨씬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적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무슨 무슨 마피아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평상시 양보와 배려와 헌신의 희생입니다. 최대한 약자를 배려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희생—그것이 수범적 보수입니다.

〈이 글은 3월 2일 한국선진화 재단 245회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 요약입니다.〉

법치와 국가안보 확립... 전체주의 국가는 '人治'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희망적 행동' 수범해야

전통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관습을 중시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수구가 되고 반동(反動)이 돼 수구반동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 경험주의 반대는 선형(先驗)주의입니다.

둘째로 점진주의: 개혁은 하되,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하지 않고 서서히 합니다. 「새술은 새 그릇에」 하는 구호는 보수주의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적절한 것(proper) ⑧미래 행복보다는 현재 즐거운 것 등을 들일 수 있습니다.

△수범적 보수

수범적 보수의 수범(垂範)은 가진 자가 모범적으로 앞서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대개는 가진 자들이고, 또 가진 자들이 대개는 보수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은 많이 가진 것만큼 희생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

THE PEN

송복 대한언론인회 원로 회원은 한국선진화재단 정책세미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과 절연하고 종교에 귀의하면 대통령 탄핵으로 유명해진 정치인·법조인·청와대 비서·종편 출연 언론인들을 간신으로 배역한 역사드라마와 역사소설이 호평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편집자의 편지〉

누리당 대표의 야반도주에서 대통령 검찰출두까지 박 대통령 파면 파동에는 많은 간신과 모사꾼들이 한몫을 했으니 드라마 설정은 가능할 것 같다. 사화나 당쟁은 왕조실록보다 야사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다. 1977년 구자춘 서울시장 청원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세조실록을 근거로 사육신을 유응부 대신 김재규

도 4월호의 아젠다로 설정했다, 이도형대한언론인회 회우, 배성동 서울대 명예교수, 이두원연세대학교 교수, 조성환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의 특별논단은 이번 대선의 문제점을 검증하고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론과 시장경제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경제 공약에 대한 논평은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 구호로 내걸은 적폐청산(積弊淸算)은 민주화 이후 YS, DJ, MB, 노무현 정치 실세가 저지른 부패와 구악정치 극복이 목표가 돼야 하지만 구체안이 없어 구두선(口頭禪)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래 적폐청산은 김철준 서울대학교수가 해방 20년 한국의 시

부패 분열 반란의 정치 적폐 청산하길

정보부장의 조상 김문기로 바꾼 적이 있었으나 1982년 국편이 생육신 남효온(南孝溫; -1454 ~ 1492)의 육신전·추강집,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등 재야 선비들의 기록대로 유응부로 다시 바로잡았다. 박 대통령 파면 사태도 현재 결정문과 언론보도를 뒤집는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국회·언론·현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합의했으나, 탄핵 소추·현재 심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체제전복의 종착역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대한언론은 이번 사태를 지켜본 원로 언론인들의 증언을 4월호에 남긴다. 이병대 발행인을 비롯 최명우 서육식 육정수 박문두 장석영 유한준 유자호 김광섭 장석훈 조희곤 이철영 편집위원의 방담은 현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탐사 저널리즘이다.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온 노재봉 전 총리의 ‘현시국에 대한 사상적 진단’과 한국자유회의의 현재 대통령 파면에 대한 반박문도 간추려 전한다.

한달 뒤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

대과제로 식민지 체질 극복과 함께 제시한 명제였다. 율곡(1536~1584)이 반란세력의 패거리 정치 부패에 의한 국가 위망지상(危亡之象)으로 지적한 민궁어적폐(民窮於積弊)를 인용해 한국정치 구악 극복을 제기한 것이다. 율곡은 이방원(태종)이 유(세조) 이여(중종) 이종(인조)의 반란과 분열에 동조했던 한명회 신숙주 권람 이극돈 유자광 유형원 등 250명의 훈구 세력의 패거리 정치 적폐(積弊)를 청산하지 않으면 국민 윤리타락, 관료부패, 선전선동정치, 악법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YS, DJ, MB, 노무현 정권의 분열·반란·반동 정치의 적폐(積弊)에 의한 부패와 국가기강 해이는 세월호참사·IMF·경제양극화·실업자 양산·저질정치인 부상 등으로 사회통합을 꾀다. 지난 20년 패거리 정치 적폐에 의한 법조·언론·교육계 분열은 국회결의 현재 판결까지 불신케 됐다. 대통령 선거 구호로 등장한 적폐청산 실천을 추적하는 언론의 선거 감시 기능을 기대한다.

박석홍 편집위원장

살며 생각하며

효심 되새기는 佳節

전국서 성묘 나들이 길 화풍난양(和風暖陽)의 기맥이 통하는 새봄 4월이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민생 경기는 동빙한설(凍氷寒雪)인데, 정치판은 대통령 탄핵정국의 회오리바람을 겪고 5·9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향해 때아닌 춘투(春鬪) 속에 뜨거운 열풍을 거세게 불어댄다.



유한준

본회 편집위원
전 독서신문 편집국장

정유년 청명은 4월 4일이고, 한식은 5일이다. 대개 한식은 식목일과 겹친다. 청명(淸明)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말이고, 한식(寒食)은 불을 피우지 않고 전날 마련해 둔 찬 음식을 먹는다는 날이다. 청명은 한식 하루 전날 드는 것이 통례이나 같은 날일 경우도 있어, 민가에서는 구분 없이 청명한식이라고 부른다.

“이날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 불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치고, 임금은 이 불을 정승과 판서를 비롯한 문무백관과 전국 360개 고을의 수령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이를 임금이 내리는 불이라 ‘사화(賜火)’라 하였다.”고 밝혔다.

청명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그 해 농사가 잘되고 풍년이 들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바닷가 어촌마을 사람들은 청명한식에 날씨가 좋으면 어종(魚種)이 많아져서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원하였다. 이때에 파도가 거세어지면 물고기가 흔하다고 이른다.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청명한식에 나무를 심는데, 특히 이날

조상숭배·제사지내는 한식날은 4대 명절 청명에 오동나무 심어 딸 시집 장농 제작

청명한식 때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는 풍습이 전해온다. 청명한식에 성묘하는 풍습은 신라 때부터인데, 고려 때에는 한식이 대표적 명절로 숭상되어 관리에게 성묘를 허락하고 죄수의 금형(禁刑)을 실시했다. 조선에서는 민속적 권위가 더욱 중시되어 조정에서 향연을 베풀었다.

한식을 설, 추석, 단오와 함께 4대 명절로 꼽았다. 해마다 청명과 한식 때는 화창한 봄 날씨와 더불어 곳곳에 성묘객들로 넘쳐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청명이나 한식에는 지상에 있는 신(神)들이 하늘로 잠시 올라가는 절기라, 손이 없다 하여 특별히 택일을 하지 않고도 산소를 돌보거나 이장(移葬)을 해도 좋고, 조상의 묘 자리 고치기, 비석 세우기, 집 고치기를 비롯해 아무 일이나 해도 무난하다고 여긴다.

옛 풍습에는 청명 15일 동안을 5일씩 3후(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오동나무의 꽃순이 피고, 중후(中候)에는 종달새가 나타나며, 말후(末候)에는 무지개가 보인다고 하였다.

<동국세시기> 청명조(淸明條)에,

심는 오동나무는 ‘내 나무’라 하여 딸이 출가할 때 장롱을 만들어줄 재목감으로 삼았다.

한식의 전설과 유래

한식의 기원은 중국 진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세라고 전한다. 개자추는 문공(文公)과 19년간 망명생활을 함께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충심으로 보좌하였다. 그러나 문공은 군주의 자리에 오른 뒤 옛 충신인 개자추를 잊어버리고 등용하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개자추는 면산으로 들어가 은거하는데, 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문공이 불러도 나아가지 않았다. 문공은 개자추를 산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불을 질렀으나, 그는 끝내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고 말았다.

개자추의 충성심에 감동한 사람들이 애도의 뜻으로 이날 하루 동안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는 말도 전한다. 이러한 기원과 함께, 옛날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에 나라에서 새 불을 만들어 쓰도록 권했다.

알림

춘계 문화역사 탐방 5월 2일 경북 문경으로

춘계 문화 역사 탐방을 5월 2일 화요일 경북 문경으로 떠납니다. 문경은 옛날 영남 선비들이 과거보러 한양으로 갈 때 넘어가던 고갯길 아래 고장입니다. 다음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5월 2일 오전 8시

△ 출발지 : 프레스센터 앞(신동아 고속관광버스 3대)

△ 일정 : 문경새재 찾사발 축제(도자기)→ 중식→ 봉암사→ 석식→ 귀경

△ 준비물 : 간편 복장

△ 접수 :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이메일 kjc1405@hanmail.net, 전화 732-4797, 4798

문자 010-8867-5931

△ 기타 : 골고루 참석하도록 대신 접수, 사전 접수 사양합니다.

연회비 2년 이상 연체한 분은 참가를 제한합니다.

일정은 추후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회, 중앙추모공원과 30%할인 계약

‘그날’ 이후 당신의 永眠 더욱 편안히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추모공원묘지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소재 중앙추모공원 측과 대한언론인회 회원에게 특별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계약에 따라 대한언론인회 회원은 이 추모공원을 이용시 대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이용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문을 연 중앙추모공원에는 납골당을 비롯하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잔디장 및 수목장을 갖추고 있는데 위치와 장례방법에 따라 1인당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한데 기존 추모공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서울시청에서 80Km지점에 위치해있어 자유로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약 70분 소요되는데 관심있는 회원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31-833-7737 · 회보광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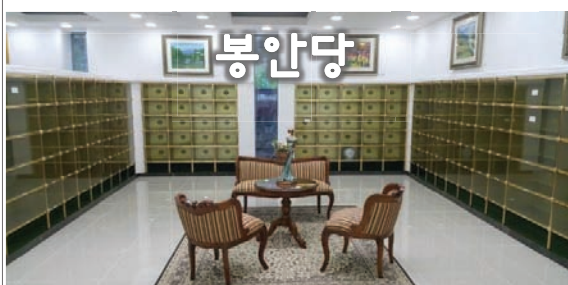
-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 회원은 추모공원이나 본회에 연락을 하시면 단체로 현장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은
영혼의 안식처

7천평의 넓은 대지에
잔디장, 수목장, 봉안당
모두 갖추어진
국내 최초, 최대의
친환경 추모공원입니다.

4월 중 계약하는 대한언론 회원에게는 32인치 TV세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중앙추모공원



고객상담전화 031-833-7737, 7738

주소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313-1(마유로 58-38)
E-mail : cmp5838@naver.com / Fax : 031-835-7737

장수만세

구순 맞은 지갑종 유엔한국참전국 회장(11·12대 국회의원)

“정신이 체력을 지배한다”

글 : 김선옥 편집위원·전 한국방송공사 라디오제작센터장

올해 정유년 닭띠해에 구순을 맞은 지갑종 유엔한국 참전국 협회장을 만났다.

우리 나이 90세를 일컫어 구순(九旬)이라 한다. 육순(60) 칠순(70) 팔순(80)처럼 순(旬)은 열을 뜻하는 한자로 구 곱하기 십이 되어 90이 되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요근래 억지스럽게 일본식 표현인 90세를 졸수(卒壽)라 부르게 되었고 66세를 뜻하는 미수(美壽) 77세 희수(喜壽) 88세 미수(米壽), 그리고 99세를 일백 백(百)에 하나를 뺀다해서 백수(白壽)라 칭하고 있다.

90세의 졸수는 쉼이 마친다 죽는다는 뜻이 있어 민망한 한자여서 쓰지 않아야 할 일본식 조어(造語)라고 백과사전은 해석하고 있다. 어쨌든 구순을 맞은 지갑종 회우는 열 아홉 살 때 미 군정청에 근무하다 로이터 통신의 종군기자가 되어 6·25 전쟁을 누비고 다녔던 일들을 70여년 전 일인데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 인연으로 1963년 참전국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한국참전국협회”를 창설했고, 1977년부터 회장직을 맡아왔다고 했다. “제 이름에 들어 있는 갑(甲)자는 할아버지가 회갑을 맞은 해에 태어나 붙인 것입니다. 고향이 광주인데 당시 개성에 있는 송도중학으로 유학을 갔을 정도로 집안 살림이 넉넉했습니다. 성격이 괄괄해서 성적은 갑이 별로 없지만 군정청에 근무해서 영어는 제법 한다는 소릴 들었고 그 덕에 로이터통신 기자가 된 것입니다.” 기자로

있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며 당시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즈음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원조요청을 하러 갈 때 일입니다. 김포공항에서 만난 대통령은 지친 모습이었고 피로해 보이고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다가가 “각하, 미국 가시는데 좀 차려 입으시지요” 그랬더니 내 귀에 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뭔가 얻으러 가는데 너무 말쑥하거나 깨끗하면 도움이 안 되는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국가를 재

6·25때 19살 로이터통신 종군기자로 전장 누벼
옛 참전 용사 근황 취재 158일간 세계16개국 순방

건하려는 대통령의 지혜와 애국 애족을 감동 깊게 느꼈다”고 했다. 지갑종 회장은 연합신문 기자로 근무할 때인 1958년 10월24일 UN데이를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근황을 취재하기 위해 158일간 열 여섯 개 나라를 홀로 방문했다. 동남아를 거쳐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과 북미 남미 이후 오세아니아를 잇는 대장정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1967년부터 참전국들의 기념비 세우기에 전력을 기울였고 그 첫 번째 성과가 경기도 가평의 영연방(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참전 기념비이다.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헌화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참전국이 치른 격전지에 기념비를 세운거예요.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니 돈이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군기자 때 알던 군 인사들이 적잖은 도움을 주셨어요. 기념비 사업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다고 했다. “1968년 춘천에 세운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때마침 방한한 에티오피아 황제가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어요. 제막식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환영 나온 인파에 감격해 “내가 어느 나라 황제인지 모르겠다”고 기뻐했다는 것이다.

지갑종 회우는 11대·12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 무렵 6.25 전쟁 때 국군이 노획한 김일성 승용차를 미국의 한 자동차 수집상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 십년 추적한 끝에 1982년 되찾아 왔고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B29 폭격기를 들여와 전시하기도 했다. 구순의 나이이지만 마포에서 여의도 사무실까지 휴일날만 빼고 매일 출근하는 지갑종 회우는 정신건강이 체력건강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가리는게 없이 무슨 음식이나 맛있게 먹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흘러간 노래를 들으며 풀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갑종유엔한국참전국 협회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자료를 바라보며 이 사업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홍용수 회우 자산 관리 특강 최종회

홍용수 회우의 노후 자산관리 월례 특강이 “꿈을 실천한 부자들”을 주제로 3월 9일 아쉬움 속에 종료됐다. 5개월간 많은 회우들이 참석은 못했지만, 참석자들은 알찬 내용이라고 이구동성이었다. 마지막 내용을 간추려 본다.

부자들의 정신은 꿈을 꾸고 미친 듯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개척정신이다. 부자가 되고픈 꿈은 누구나 꾸지만, 미친 듯이 실천하느냐 여부가 성공을 좌우한다.

2년 전 통계에 전 세계 억만장자는 1700명인데, 그중 32세에 부(富)를 일군 사람도 있다. 재산 750억 달러로 세계 부자 1위인 빌게이츠는 20세인 1975년에 소프트웨어사를 설립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의 위기는 나에게 큰 행운이 될 것 같다”는 믿음으로 매진한 결과이다.

석유왕 록펠러는 55세에 갑부가 됐지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온다”는 정신으로 자선 사업에 정진했다.

다. 건강 문제로 5년 밖에 못산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자선사업을 하면서 43년을 더 살았고, 부를 누렸다.

조선 사업에 성공한 정주영 회장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신화적 인물이다.

조선 불모지 시절에 정 회장은 설계도를 들고 무조건 영국 관계자를 찾아가 배 2척의 주문을 요구했다. 그쪽에서는 코웃음을 쳤지만, 정 회장은 거북선이 들어있는 한국 지폐를 보여주며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 먼저 배를 만든 나라임을 밝혀 결국 3척을 주문 받는

꿈을 실천한 부자들



홍용수
본회 회우
NSI자산관리연구소
명예회장

데 성공했다.

작은 ‘삼성상회’ 운영을 하다 일가를 이룬 이병철 회장과 이근희 부자, 취직시험에 30번 낙방 고배를 마시고 노력 끝에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된 마빈, 굶주린 국민들을 실용주의, 강력한 부패척결, 천재 키우기 정책으로 부국으로 바꾼 싱가포르의 리관유 총리, 56년에 36만원으로 시작해 거부가 된 증권투자 전문가 워렌버핏 등 수없이 많은 성공자가 있다.

꿈을 위해 도전하는 정신은 어린 시절 교육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토론과 질문 없는 주입식 교육이고, 꿈을 이루기보다는 성장 후 부모에게 손 벌리게 하는 교육이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하는 민족은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은 최근 통계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인물 중 100명이 있고, 주로 경제 분야의 성공자들이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300명 중 100명이 유대인이고, 미국 변호사 70만 명 중 14만 명이 유대인이다.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 출신이다. 왜 그들은 탁월한가? 그 이유는 부모들의 교육 방침에 있다.

그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시킨다. 공부도 1등하라고 하지 않는다. 창의적 생산을 가르친다. “물고기를 주면 한 끼를 먹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먹는다”는 게 그들의 신념이다.

지금 시대는 I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도 뜨고 지는 분야가 매일 다

미래직종 예측… 시대변화 적응하라

회우가 펴낸 새책

『夕陽에 노을 진 旅程- 나의 삶 언론行路』

- 鄭雲宗 자음

鄭雲宗(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회우가 ‘夕陽에 노을 진 旅程- 나의 삶 言論行路’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팔순 생일을 기념해 펴낸 자서전으로 자신의 성장과정과 지난날 몸담은 직장에서의 삶을 진솔하게 회고하고 있다. 책에 실린 시평들은 저자가 1998년 ‘논설위원 30년’ 출판이후 여러 정기 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글들 중에서 선별한 것이다.



성장과정·지나온 삶을 진솔하게 회고

또한 저자가 그동안 함께 일했거나 다른 출판물에 기고한 인물들에 대한 ‘고맙고 소중한 인연’을 싣고 책 후미에는 저자가 돌아보고 발표한 산행 기록을 현장감 있게 소개하고 있어서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도서출판 태봉 발행 574쪽 값 15,000원

르고, 세계적 대기업의 위상도 변화하며, 산업 혁명시대가 오고 있다. 이젠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할 때이다.

미래에는 직종이 100여종으로 새롭게 바뀌고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인간신체 개조 전문 의사가 각광받고, 의료관광이 호황이며, 낮에는 놀고 밤에 일하는 야근시대가 오며, 기후변화 관련 분야가 뜨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소송 전문 변호사가 뜨게 될 것이다. 시대 변화를 읽고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해진다.

회우건강칼럼

백세 시대의 효자 효녀

윤재홍

·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외래교수
· 가나 문화콘텐츠그룹 부회장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살고 있다. 누구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가족들

건강유지에 우선적으로 노력한다. 특히 노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70대 전후 부모의 외양과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꼭 살펴야 한다. 부모님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가정의 큰 불행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노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질문에는 한결같다. “아픈 곳이 없다. 걱정마라. 살 만큼 살았다. 너희들이나 건강에 신경 써라!”이다. 노인건강 전문의 사들이 내놓은, 가정에서 노부모의 건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강체크 10계명을 소개한다.

1) 시력변화이다.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질환 여부와 시력을 점검한다. 2) 청력변화다. 귀가 어두워지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다. 이비인후과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3) 입안의 위생상태이다. 입안 청결상태와 치아상태, 잇몸과 혀의 염증상태 등을 점검한다. 4) 어깨와 팔다리 관절과 근육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어깨 팔꿈치 관절 통증 등을 세밀히 관찰한다. 5) 대소변을 편하게 보는지 점검한다. 변비와 대변색, 치질 여부, 자주 마려운 소변색, 소변을 못 참는(요실금) 등도 알아본다. 6)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70세가 넘으면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기억력 상실, 간단한 계산능력 저하 등을 알아본다. 7) 우울증 증상 파악이다. 우울증이 심하면 외출 기피, 움직임과 식욕저하, 피로 불면증까지도 알아본다. 8) 앞가슴 통증여부이다. 앞가슴이 죄어지는 아픔과 짓누르는 통증 여부를 물어 협심증 위험을

70대 질병절벽 넘어 80세 통과하면 장수 합격 건강 10계명 체크...걷기 운동으로 근육량 늘려

체크한다. 9) 기침의 정도와 상태이다. 특별한 증상 없이 마른 기침의 폐암 증상과 코막힘 등 비염이나 축농증 등 원인을 알아본다. 10) 손발이 자주 절인지의 여부다. 손발이 자주 절이면서, 얼굴 안면 감각이 이상하고, 한 쪽 힘이 빠지면서 발음이 어눌하고, 심한 두통의 경우 뇌혈관 질환 여부를 알아본다. 노인 건강 전문의사들은 이같은 건

강 체크 10계명을 노부모에게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규칙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70대 질병 절벽을 넘어 80세를 통과해야 100세 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현대 의학에서는 80세에 큰 질병 없이 일상생

활을 활발히 잘 하면, 대부분 100세까지 간다고 한다. 장수의학계에서는 이를 ‘80세 컷 오프라인’이라고도 한다. 80세 이후에는 새로운 질병이 적게 생기고, 발생해도 진행이 느리다고 한다. 그러니까 80세 이후는 낙상과 폐렴 등 몸 밖의 요인이 장수를 방해할 뿐이다. 따라서 노부모들은 자녀들의 부모 건강 체크에 앞서 스스로가 자신

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첫째, 뇌혈관 질환 등 심혈관계 질병 예방을 위해 체중,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해야 한다. 둘째, 5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량이 줄어들어 꾸준한 걷기 등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 근골격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60대부터 암 검진 위주의 건강검진에만 매달리지 말고, 가족의 질병 발생 내력과 취약성 등 질병 조기 발견에 힘써야 한다. 넷째, 70대부터 시작하는 질병인 정신 질환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정신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예방에 스스로가 힘써야 한다. 다섯째, 80세가 넘으면 질병보다 낙상이나 면역력 저하로 사망하기 쉬우니 근육과 뼈를 강하게 유지하도록 애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은 사회활동이 적어,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쉽지 않아 비타민, 필수아미노산을 섭취하고 비타민D 생산을 위해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쬐어야 한다. 나이 든 부모들이 병들어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있게 되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다. 병든 부모에게 많은 의료비 부담으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기 쉽다. 부모들은 정든 가족의 품을 떠나 요양원에 있게 되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해 엄청난 외로움과 슬픔을 겪는다고 한다. 100세 시대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효자 효녀의 부모사랑이 필수적이다. 노부모도 자식 사랑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한방 침술 치료기

전립선을 침으로 제어 한다

지난 3월 17일 대한언론인회의 의료 프로그램인 침술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진료 때는 허리통증으로,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었다. 진료 시작은 오후 2시, 내가 도착한 시각은 2시 5분이다.

더 많은 회우들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동안 의사 선생님 세 분과 우리 회 이향숙 사무총장님, 나용경 행사위원장 등 6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의 첫째는 회우들의 참여율이 왜 낮은가(?)였다. 그동안 의료진의 참 진료로 효과를 본 탓에 당연히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러니 앞으로는 회원 가족이나 비회우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자는 안이 나왔다. 이 총장도 좋은 의견이라며 추진했다.

또 참여율을 높이자면 진료 하루 전 회우들에게 문자를 한 번 더 보내 혹은 잊고 못나온 분들을 위해 기억을 되살리게 하자는 안도 있었다.

둘째는 침술이 과연 얼마나 효험이 있을까였다.

이 총장의 증언을 들어보자.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일률적인 적

용은 아니라도 우리가 자주 뵈 수 있는 분으로 제재형 고문을 예로 들자면 제 고문은 다리가 불편해 오래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닌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그런데 두나미스 의료진의 침술로 여러 번 침을 맞고 지팡이 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는 것이다. 제 선배 뵈을 날 멀지 않을 테니 그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 나는 의사 선생님께서 전립선 비대증도 침으로 치료가 되느냐고 물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비뇨기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전립선이라는 건강 보조제를 2년 넘게 복용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두나미스 봉사단, 진료혜택 회우가족까지 범위 확대

는 점 등등을 부연하면서... 한참 듣고 있던 김의 열 선생님의 말씀. “한번 해 봅시다!”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는 듯이...

선생님은 이런 환자를 치료한 적도 많다는 말에 일행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경청했다.

그 봉사단이 연전에 거제 조선소에서 봉사할 때 68세의 어느 노인은 남성성이 녹아 들어 그 기능이 상실된 지 5년. 그러니까 이분이 72세 때에 김 선생과의 운명적인 조우로 그 기능이 거의 회복됐다며 다음날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 말에 우리들은 눈에 번쩍 빛이 났다. 내 입장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침을 맞아보려다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기능까지도 치료받게 된 셈이다.

선생님은 배꼽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4~5대의 침을 꽂았다. 몸 깊은 곳까지 찌릿찌릿함이 느껴졌다.

돌아누워 엉덩이에 또 그렇게 침을 맞았다. 진료 시간을 20여분. 환자가 적은 탓에 넉넉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만큼의 소득도 움켜쥐었으니 이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더 이상 환자가 오지 않아 오후 3시에 철수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소변줄기가 조금 시원해졌음을 느꼈다. 침의 효과인가 생각됐다.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의술에 내가 함몰한 것은 신통하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大韓言論 8월호에 한방진료기를 적어 달라는 편집진의 원고 청탁이 있었다. 그때 허리통증으로 침을 맞고 경제가 심리인 것처럼 병도 심리 탓이라고 쓴 글을 기억해 본다. 그 후 8개월이 지났지만 허리는 멀쩡하다. 이번에 또 병도 심리 탓임을 증명해 볼 데이다. 아니 두나미스 한방 봉사단의 “한 번 해 봅시다!”라는 말을 믿을 거다. 요즘은 서양에서도 동

양의 침술에 환호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중순 또 한 번 침술의 영험을 고대해 본다.

권영국 본회 회우 · CBS해설위원장

회우동정

서울대 관악대상 수상



안병훈(전 조선일보 대표이사 부사장·도서출판 기파랑대표)회우= 3월 17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불룸에서 열린 서울대 총동창회 총회 겸 제19회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관악대상을 수상했다.

체육언론인 회장 추대



이중세(전 동아일보 스포츠사업팀 국장)회우= 지난달 30일 총회에서 제8대 체육언론인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 회장은 동아일보 체육부장을 거쳐 현재 언론중재 위원회 중재위원과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에



남시욱(전 문화일보 사장)회우= 2월 16일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제19차 이사회에서 동 재단 제4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 법인은 1960년 4·19 학생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려대생들의 4·18 유공자들 모임이다.

KBS사우회 부회장 선임



김선옥(보회 편집위원)회우= 최근 KBS 사우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김회우는 KBS 라디오 센터장과 아트비전 상임이사, 경인방송 사장을 역임했다.

TV중간광고 규제개선 세미나

이보길(전 KBS 해설위원. 한국신문방송연합회 회장)회우= 4월 1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에서 “지상

파 TV중간 광고 규제 개선의 논리적 근거와 도입 방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7 무사 산행 기원”

본회 산악회 40여 산우 북한산서 시산제



인 이상호 명예 회장을 비롯 산행에 가장 많이 참여한 김영호 고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어 오후 1시에 불광역 인근 ‘해돋이 힐집’에서 뒤풀이 오찬을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달 3월 23일 북한산 향로봉에서 정유년 시산제를 가졌다.

이날 시산제에는 본회 이병대 회장, 산악회 최귀조 회장, 지용우, 안종우 등 40여 명의 산우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 회장

가졌다.

이날 시산제에는 본회 협찬금과 이병대 회장, 지용우, 정운종, 안종우, 김의수, 박기병, 박 실, 김영호, 강진형, 이태영 고문, 이상호 명예회장, 최귀조 회장, 장 옥 부회장, 김휴선 감사, 윤산학 산행대장 등이 찬조금을 기탁했다.

회비 납부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연회비, 찬조금 협조바랍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2017. 2. 21~ 2017. 3. 20)

<찬조금>

김용발(전 한국경제신문 유통경제부 차장·현 인터넷신문 메디팜 뉴스 대표) 50만원
민병돈 9만원

<입회비>

이도선 50만원 하장춘 10만원 (일부)

<연회비>

김용발(27, 28, 29, 30)	최신호(17)	노재성(17)	송호창(17)	성낙오(17)
주중환(16)	최종철(17)	신우식(16, 17)	장석영(17)	신정호(17)
안홍렬(16, 17)	김철진(15)	육정수(17)	구월환(16)	남시욱(16, 17),

◀ 주소 변경 ▶

▲ 김철진 회우 =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9길 1-12, 609동 405호 (신원동 포레스타 6단지)

6·25 참전 미국전사 영웅 2명 동상 건립

서진섭 회우



서진섭(전 동아일보 사회부)회우는 요즘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2명의 미국 장교인 브라이언트 무어 9군단장과, 필드 F. 해리스 해병대 대장의 동상을 여주에 건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무어, 해리스 두 장군은 여주에서 전사했는데, 서진섭 회우의 고향이기도

해서 더욱 뜻깊은 사명으로 여기며, 동상 건립 기금 모으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84세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두 동상 건립 자금 18억원 모금에는 조금도 피곤한 기색 없이 활동하고 있다. 무어 9군단장은 미국이 6·25전쟁에 참전한 초기 작전 지휘 중에 헬기 추락사고로 여주 신흥사 건너편 언덕에서 전사했다.

해리스 해병대 대장은 함경도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부친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여주에서 전사한 용사이다. 그는 이미 7년 전 용산 미군진영 내에 워커장군 동상을 건립한 바 있다. 이러한 공을 치하하는 당시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다.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공동대회

10년만의 대 통합…4월 17~22일 세계 36개도시 90여 언론인 참가

전 세계 재외 한인언론사들이 대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모국 대한민국에 모인다.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회장 김소영 밴쿠버 중앙일보 발행인)와 (사)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회장 전용창 교민광장 발행인)가 공동으로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를 개최한다.

10년만에 대통합의 결실을 맺게

된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는 4월 17일(월)부터 4월 22일(토)까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28개국 36개 도시 약 90여명의 신문 방송 언론인들이 동참한다.

올해로 16회째인 재외한인언론인대회는 2002년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재외동포기자 초청대회’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언론가 소식

33대 김장겸 사장 취임식

MBC

2월 28일 제33대 김장겸 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 사장은 인사말에서 “품격 있는 젊은 방송으로 혁신하겠다. 1등 방송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잠재력 발현이 가능한 젊은 방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최초 UHD 시험방송

KBS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송의 UHD시험 방송을 지난 2월 28일 새벽 5시 여의도 본사에서 실시했다. 이 방송은 5월 31일로 예정된 본 방송에 대비한 예비 실험이다. 이에 대해 고대영 사장은 “방송 역사에 기록될 세계 첫 지상파 UHD의 큰 걸음을 KBS가 내디뎠다. 지상파 방송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승명호 회장 언론경영자상 수상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이 2월 22일 모교인 고려대에서 高大 언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또 41년만에 베트남에 특파원을 2월 1일자로 파견했다. 한국일보는 월남전 종식 때도 언론사 중 가장 늦게까지 특파원이 주재했는데, 이번에도 종전 후 처음으로 41년만에 특파원을 호치민 지사에 파견해 동남아 뉴스를 담당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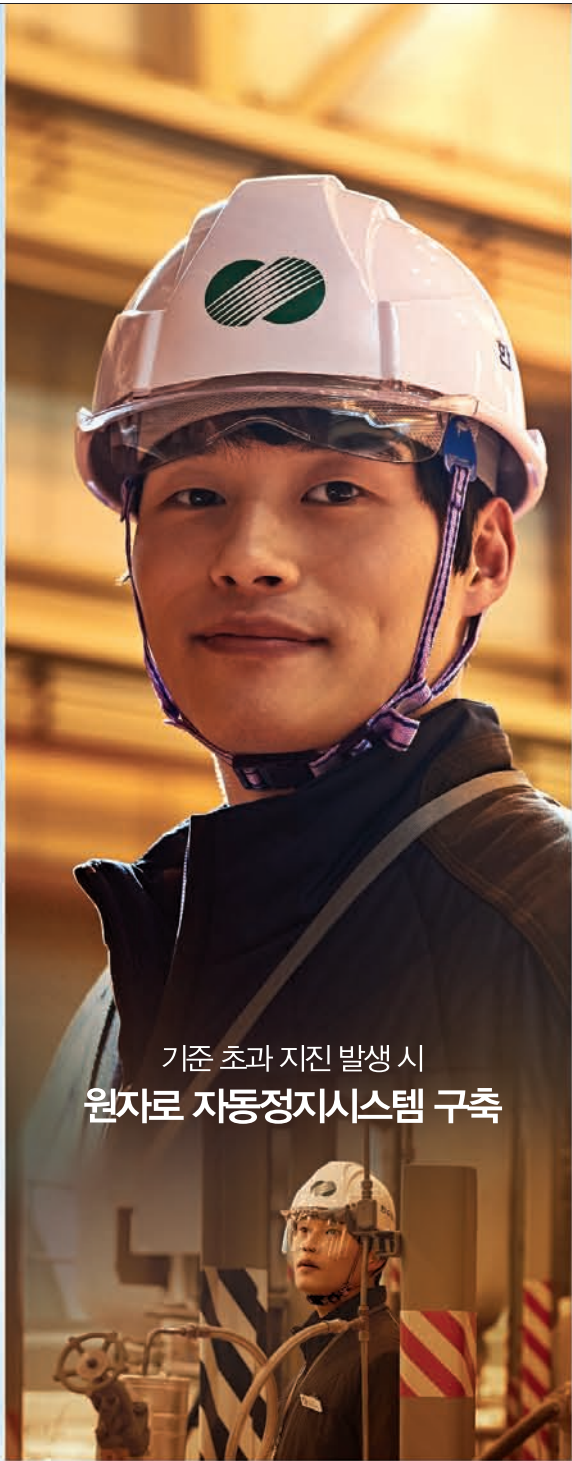
경향사우회 소식

경향사우회

회보 제55호가 지난 3월 25일자로 발행됐다. 1면에는 이원창 회장의 인사말 ‘OB·YB 손잡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3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초대석에는 손주환(전 공보처 장관) 원로회우를 모셨고, ‘제2인생 꽃피운 경향인’ 코너에는 신간 ‘성철평전’을 펴낸 김택근 회우(전 경향닷컴 사장)의 이야기를 실었다. 또 경향 70년만의 첫 여성 편집국장이 된 김민아 국장 인터뷰, 당찬 포부를 들었다. 동아리 모임인 OB산악회 창립 20주년 산행기는 산악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이제껏 산악회를 이끌어온 지용우 원로회우가 기꺼이 맡아 썼다.

월간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李炳大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李享淑
- 편집위원장 겸 주필 朴錫興
- 편집국장 崔命宇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5호 (프레스센터)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3배에도 끄덕없는
내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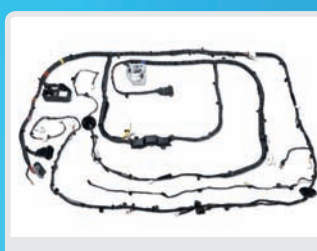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안전입니다**



기술유라 품질유라

‘미래자동차의 최전선’ 유라가 맡고 있습니다.



Wiring Har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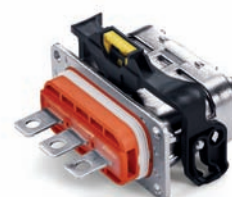
ICU (Integrated Central Control Unit)



High Voltage Junction Block



High Voltage Cable



HEV Connector



Fast Charging Interface

